

전자정부 선진국의 정책추진 동향

- ② 아태지역 [싱가포르 · 호주 · 일본 · 홍콩]

CONTENTS

1. 개요	3
2. 아·태 지역 4개국의 전자정부 추진 동향	4
3. 요약	8



부록 - 아·태 지역 4개국의 전자정부 Fact Sheet

□ 싱가포르	11
□ 호주	29
□ 일본	51
□ 홍콩	71



전자정부 선진국의 정책추진 동향

② 아·태 지역 [싱가포르·호주·일본·홍콩]

2012. 5



1 개요

- 2012 UN 전자정부평가 결과 한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호주, 일본이 상위 20위권 이내에 랭크
- 아·태지역 내 전자정부 상위국 및 정보화 관련 지수 상위 4개국(싱가포르, 호주, 일본, 홍콩)에 대한 전자정부 추진전략, 법령, 전담부서 등 전자정부 추진 동향 조사

〈주요 국제기구 평가지수 순위〉

순위	2012 전자정부발전지수	2011 ICT발전지수	2012 네트워크준비지수
1위	한국	한국	스웨덴
2위	네덜란드	스웨덴	싱가포르
3위	영국	아이슬란드	핀란드
4위	덴마크	덴마크	덴마크
5위	미국	핀란드	스위스
6위	프랑스	홍콩	네덜란드
7위	스웨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8위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9위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10위	싱가포르	영국	영국
11위	캐나다	노르웨이	대만
12위	호주	뉴질랜드	한국
13위	뉴질랜드	일본	홍콩
14위	리히텐슈타인	호주	뉴질랜드
15위	스위스	독일	아이슬란드
16위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독일
17위	독일	미국	호주
18위	일본	프랑스	일본
19위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20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이스라엘
21위	오스트리아	마카오	룩셈부르크
22위	아이슬란드	벨기에	벨기에
23위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24위	벨기에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25위	슬로베니아	스페인	아일랜드

주 : 홍콩은 'UN 전자정부발전지수' 평가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음

1 싱가포르

○ 정보화수준

구분	조사기관	순위	대상국가수	최근발표일
전자정부발전지수	UN	10위	193개국	2012.2
ICT발전지수(IDI)	ITU	19위	152개국	2011.9
네트워크준비지수	WEF	2위	142개국	2012.4

○ 전자정부 전담부서

- 전자정부정책 정책 전략수립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전자정부정책위원회(iGov Committee)’에서 담당하며, 정책이행은 정보통신개발청(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 IDA)에서 담당

○ 전자정부 전략

- 2011년 6월 ‘전자정부 마스터플랜(e-Government 2015 Masterplan 2011-2015, eGov2015)’이 발표되었으며, 협업정부로의 전환을 위해 ‘새로운 가치 창출’, ‘능동적 시민참여 활성화’, ‘범정부 개혁 촉진’이라는 세 가지 추진 전략 제시

○ 전자정부 관련 법령

- 단독 전자정부법은 없으며, 전자통신, 전자거래,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 등 개별법을 통해 관련된 IT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관리

○ 대표 전자정부 서비스

- 싱가포르는 전자정부 포털(egov.gov.sg)을 통해 정부 정보 및 자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2 호주

○ 정보화수준

구분	조사기관	순위	대상국가수	최근발표일
전자정부발전지수	UN	12위	193개국	2012.2
ICT발전지수(IDI)	ITU	14위	152개국	2011.9
네트워크준비지수	WEF	17위	142개국	2012.4

○ 전자정부 전담부서

- 전자정부정책 총괄은 ‘재무·규제완화부(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에서 담당하며, 전자정부전략 수립·실행은 ‘재무·규제완화부’ 내 ‘AGIMO(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에서 담당

○ 전자정부 전략

- 2011년 4월 ‘Strategic Vision for the Australian Government's use of ICT’ 초안*이 발표되었으며, ‘ICT 활용을 통한 공공 부문 생산성 제고(Increased public sector Productivity)’라는 비전 아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Deliver Better Services)’, ‘열린 참여(Engage Openly)’, ‘정부 운영 개선(Improve Government Operations)’ 등 3대 전략 제시

* 초안 이후 최종본은 2012년 4월 현재 발표되지 않음

○ 전자정부 관련 법령

- 단독 전자정부법은 없으며, 정보 접근·이용, 개인정보보호, 통신, 전자상거래 등 개별법을 통해 관련된 IT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관리

○ 대표 전자정부 서비스

- 정부 및 주·지역 정부의 관문 역할을 하는 ‘australia.gov.au’와 2009년 오픈한 ‘data.gov.au’를 통해 서비스 제공

3 일본

○ 정보화수준

구분	조사기관	순위	대상국가수	최근발표일
전자정부발전지수	UN	18위	193개국	2012.2
ICT발전지수(IDI)	ITU	13위	152개국	2011.9
네트워크준비지수	WEF	18위	142개국	2012.4

○ 전자정부 전담부서

- 전자정부정책수립은 내각부 내의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 추진전략본부(IT전략본부)(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와 ‘총무성(總務省)’이 담당하며, 정책의 이행은 ‘총무성’과 ‘경제산업성’ 및 기타 각 부처에서 담당

○ 전자정부 전략

- 2010년 5월 책정된 국가정보화정책인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전략(新たな情報通信技術戦略)’의 일부로 행정분야의 ICT활용과 이에 따른 업무 및 제도 검토를 추진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편리성 향상,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혁신 실현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전자정부 관련 법령

- 단독 전자정부법은 없으며, IT 기본법 및 행정수속에 있어서의 정보통신 이용, 전자서명 인증 등의 개별법을 통해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관리

○ 대표 전자정부 서비스

- ‘전자정부 종합창구 e-Gov(www.e-gov.go.jp)’를 통해 국민 및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4 홍콩

○ 정보화수준

구분	조사기관	순위	대상국가수	최근발표일
전자정부발전지수	UN	-*	193개국	2012.2
ICT발전지수(IDI)	ITU	6위	152개국	2011.9
네트워크준비지수	WEF	13위	142개국	2012.4

* 홍콩은 전자정부 발전지수 평가 대상국이 아님

○ 전자정부 전담부서

- 전자정부정책 총괄·수립·실행은 상무경제발전국(商務及經濟發展局) 산하에 2004년 7월 설립된 ‘OGCIO(Office of the Government Chief Information Officer)’에서 담당

○ 전자정부 전략

- 2007년 12월 발표된 ‘2008 Digital 21 Strategy’*에 전자정부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업그레이드 및 차세대 공공서비스 강화 등을 중점 추진 중

* ‘Digital 21 Strategy’은 홍콩을 세계적인 디지털 시티로 개발·발전시키기 위한 종합 ICT 전략으로, 1998년 첫 발표 이후 2001, 2004, 2008년 3차례에 걸쳐 업데이트

* ‘2008 Digital 21 Strategy’에 따라 차세대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Government Cloud Strategy’ 발표(2011. 3)

○ 전자정부 관련 법령

- 단독 전자정부법은 없으며, 개전자상거래, 개인정보보호 등 개별법을 통해 관련된 IT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관리

○ 대표 전자정부 서비스

- 2007년 오픈한 ‘GovHK(www.gov.hk)’을 통해 원스톱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국가	전자정부 전담부서	전자정부 추진전략	전자정부법	전자정부 대표포털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부 전자정부정책위원회 	e-Government Masterplan 2011-2015 (eGov2015) (2011.6)	없음 (개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egov.gov.sg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규제완화부 	Strategic Vision for the Australian Government use of ICT (2011.4, 초안)	없음 (개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australia.gov.au data.gov.au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전략본부 총무성 	新たな 情報通信技術戦略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전략) (2010.5)	없음 (개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www.e-gov.go.jp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무경제발전국 산하의 OGCIO 	2008 Digital 21 Strategy (2007.12)	없음 (개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www.gou.hk



부 록

아·태지역 4개국의 전자정부 Fact Sheet

싱가포르

호주

일본

홍콩



본 자료는 각 국가별로 전문가를 통해 직접 자료를 입수·정리한 것으로, 2012년 3월말 기준입니다.

- 싱가포르 (류현숙 박사, 행정연구원)
- 호주 (김희연 선임연구원, KISDI)
- 일본 (오희연, 프리랜서)
- 홍콩 (유은재, 프리랜서)

싱가포르

Singap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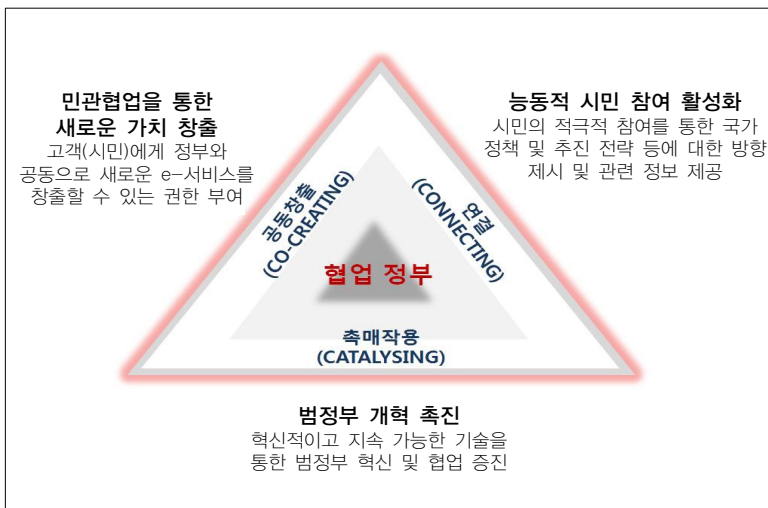
1. 전자정부 전략	13
2. 전자정부 법률체계	18
3. 전자정부 주요기관	20
4. 전자정부 서비스	23
• 인프라	23
• 국민서비스	26
• 기업서비스	28

1. 전자정부 전략

eGov2015 (e-Government Masterplan 2011-2015)

- 2011년 6월 싱가포르 정부는 이용자 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 추진을 위해 기존 ‘정부의 일방적 서비스(Government-to-You)’에서 ‘민간협업(Government-with-You)’을 기반으로 하는 ‘eGov2015’ 전략을 발표
-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협업정부’로의 전환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능동적 시민참여활성화’, ‘범정부 개혁 촉진’이라는 구체적인 세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
 - 세부적으로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혁신의 일환으로 ‘정부 웹사이트 개선 전략(Website Transformation Strategy)’과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을 고려해 ‘모바일 정부 프로그램(Mobile Government Program)’ 추진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시민참여(e-engagement) 계획 구상 및 민간 정책자문 활성화 추진
 - 차세대 브로드밴드 구축(Next Generation Nationwide Broadband Network)과 클라우드 컴퓨팅, 효율적 에너지 기술 등 범정부 차원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공부문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 추진

〈그림 1〉 e-Gov2015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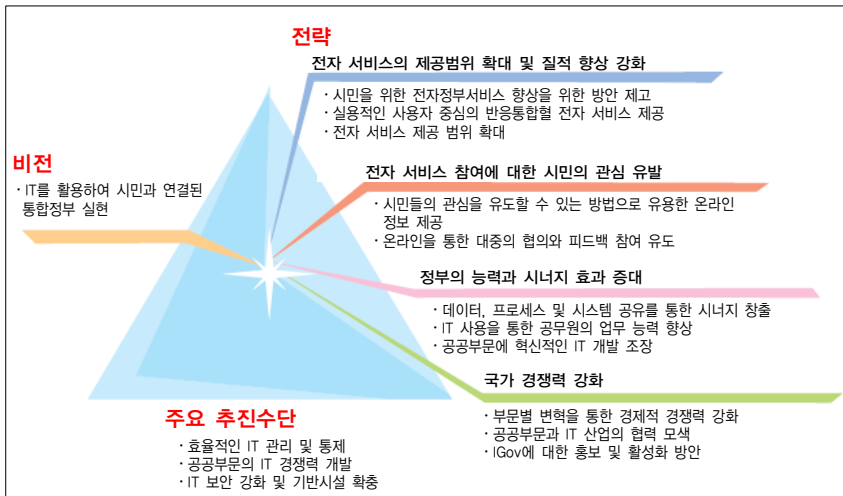


자료 : www.egov.gov.sg/

iGov2010 (Integrated Government 2010, 2006~2010)

- 2006년 5월 싱가포르는 기존의 e-GAP II를 발전시킨 'iGov2010' 전략을 발표
 - 'iGov2010'은 고객과 시민들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기관의 백오피스 개선을 핵심적 전략과제로 채택
 - 이외에 기존 15개 전자정부 서비스 통합, 정부대표 포털사이트 개편, SMS 활용 확대 등이 포함
 - 또한 고객들에게 공공서비스 접근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 제공을 위해 당시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한 이동전화 보급률에 편승한 모바일 서비스 채널 도입
- iGov2010은 전자서비스의 접근성 증가와 제공범위 확대 및 질적향상, 온라인 정치 참여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정부 능력과 시너지 효과 증대, 국제 경쟁력 향상을 4대 핵심전략으로 설정

〈그림 2〉 iGov2010의 전략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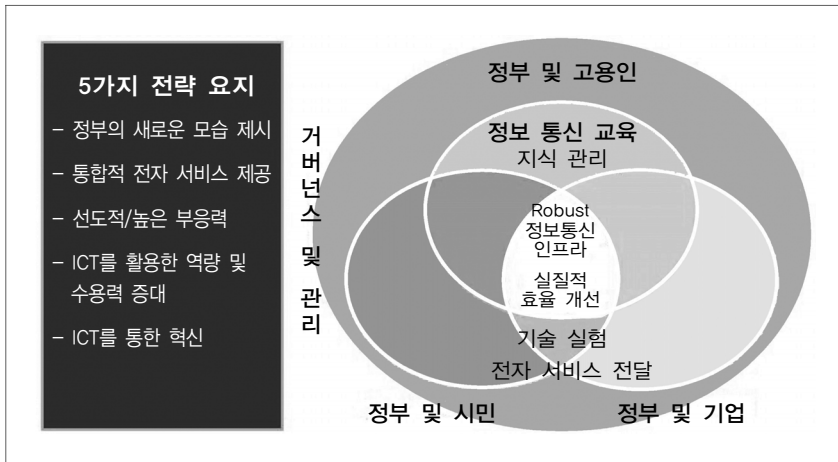
자료 : IDA, Singapore E-Government Journey, 2008

전자정부 실행계획(e-Government Action Plan)

eGAP I(e-Government Action Plan I, 2000~2003)

- 1990년대 초반 전자정부 사업의 주안점은 정부 데이터 처리 통합이었고, 90년대 후반에 공공서비스 제공의 개념을 변화시킨 정보기술 및 통신의 융합이 등장
- eGAP I은 세계에서 앞서가는 싱가포르 전자정부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마련
 - 전자정부 서비스제공, 지식기반 직장(업무현장), 기술실험, 운용상의 효율성 향상, 적응력 있고 탄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조와 정보통신 교육 등 6가지 전략적 프로그램 도입

〈그림 3〉 제 1차 전자정부 시행계획의 전략 체계(2000~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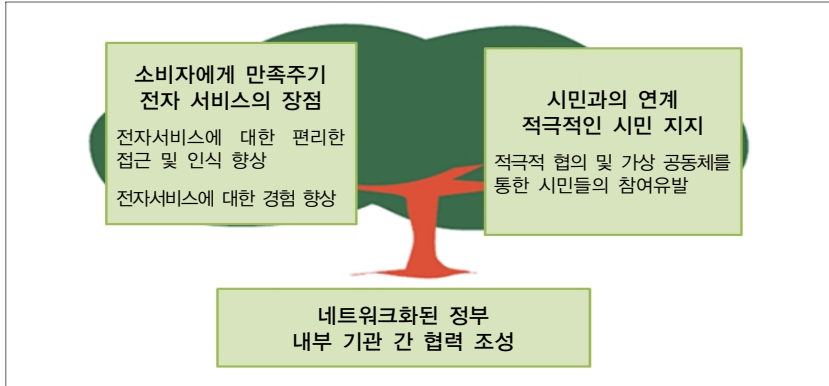
자료 : Singapore IDA, Singapore E-Government Journey, 2008

eGAP II(e-Government Action Plan II, 2003~2006)

- e-GAP I에 기반하여 네트워크 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통합되고 가치 부가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며, 시민들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2차 전자정부 실행계획(eGAP II)'을 2003년 7월 수립
- 제1차 전자정부 실행계획(eGAP I)의 핵심목표가 공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것인 반면, 제2차 전자정부실행계획은 고객들의 온라인 서비스 경험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강조

- 구체적으로 이용자들의 만족, 시민관계 제고, 네트워크 정부라는 세 가지 결과를 기대

〈그림 4〉 제 2차 전자정부 실행계획의 전략 체계(2003~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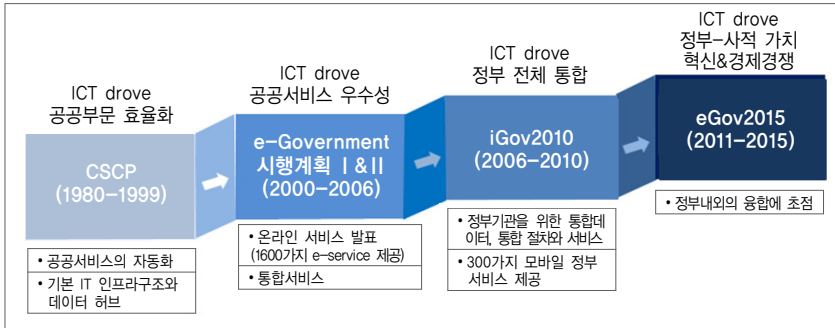


자료 : Singapore IDA, Singapore E-Government Journey, 2008

민원서비스 전산화 계획(Civil Service Computerization Programme: CSCP) (1980~1999)

- 1980년대 초, 싱가포르 정부를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 활용자로 변모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민원서비스 전산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자정부 사업 추진
 - 민원서비스 전산화 계획은 정부업무기능의 전산화, 문서감축 등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도입
- 정부전산화 계획은 점차 민간부문의 무역넷(TradeNet), 의료넷(MediNet), 법률넷(LawNet) 등의 개선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확대되면서 싱가포르 전자정부의 초석을 마련한 정책으로 평가됨

〈그림 5〉 싱가포르 전자정부의 발전 추이



자료 : www.egov.gov.sg

〈표 1〉 싱가포르 전자정부 전략 내용 및 추이

전자정부전략	추진 기간	주요 목표	주요 프로젝트
정부전산화 사업	1980~1999	- IT기술을 행정업무로 도입 - 전산화 및 문서감축 등을 통한 효율성 증진	- 정부 문서 감축 - 업무의 전산화 - 내부 업무 연계
eGAP I (e-Government Action Plan I)	2000~2003	- IT기술 융합으로 보다 많은 정부 서비스 제공	- 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 - 서비스이용인증시스템 구축 - 정부온라인상거래, 기업서비스 통합 - 기업관련 서비스 업데이트 - 기업 관련 전문가 온라인 기구
eGAP II (e-Government Action Plan II)	2003~2006	- 국민에게 접속하여 고객을 기쁘게 하기	- 시민연계 커뮤니티 운영 - 정부에 대한 연계 검색 - 공식 정부 웹사이트 오픈 - 정부서비스 웹사이트 오픈 - 온라인 기업관련 자격증취득
iGov2010	2006~2010	- 시민과 하나 되는 통합정부구현	- 개인식별고유번호 통합 - 모바일 정부 서비스 - 부문별 EA 구축
eGov2015	2011~2015	- 정부내외의 협업과 융합에 초점	- 개인화된 서비스 및 플랫폼 제공 - 모바일(mGov) 프로그램 추진 - SNS 활용 정부-시민 소통 증진 계획 - 차세대 국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 및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조성

자료 : Web2.0과 컨버전스 환경특성을 반영한 I-Government 구축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재구성

2. 전자정부 법률체계

전자정부법

- 현재 포괄적인 전자정부 법안은 없음

관련 법령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 법(Info-communication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Act, Cap. 137A)

- 싱가포르 전자정부의 추진부처인 정보통신 개발청(IDA)의 설립, 운영,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다룸.
 - IDA의 신설(establishment), 합병(incorporation), 설립(constitution)
 - IDA의 기능, 의무, 권한
 - IDA의 인력, 재정, 자산

전자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Cap. 323)

- 전자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
 - 전자통신 시스템 및 서비스 허가, 주파수이용권 승인
 - 전자통신 설치의 건립과 보수유지
 - IDA의 권한은 전자통신 시스템 및 서비스 관련 실행상 규칙, 업무 표준, 자문 지침 발행
 - 전자통신 케이블 검출 관련 업무
 - 지정된 전자통신 허가소지자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관리
 - 전자통신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위법행위와 처벌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Cap. 88)

-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은 전자거래와 전자서명을 위한 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컴퓨터로 계약서식에 예측가능성과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1998년 7월 제정
 - 2010년 7월 영구적인 보안과 전자상거래의 이용의 법적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

- 전자기록, 서명과 계약(서)
- 전자기록 및 서명 보안
- 명시된 보안절차 (예: 디지털 서명) 및 제공자/제공기관(예: 인증기관)에 관한 법령
- 공공기관의 전자기록 및 서명 사용
-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제공기관의 법적책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 현재 싱가포르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없음
 - 공직자비밀엄수법, 정부기관보안법(Government Companies Protection of Secrecy Act), 은행법, 통계법 등 다수의 개별법 조항에 포함되어 있음
- 정보통신예술부(The 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the Arts: MICA)는 개인정보보호 법안(Personal Data Protection Bill)을 발의
 - 이번엔 제안된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적용 범위(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공개 및 보존에 관한 규칙과 예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적용에 있어서의 처벌과 규제)와 같은 MICA의 입장을 반영. 또한 DNC (Do-Not-Cally) 등록의 범위 설정
 - MICA는 개인정보 보호법안(Bill)에 대해 2012년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청회를 개최하며 2012년 3분기에 국회에 법안 제출 예정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지적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일반 대중의 지적자산에 대한 접근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지적재산권 관장기관은 지적재산권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이고, IDA가 정보통신 기술 및 자문지원
- 싱가포르는 지적재산과 저작권법을 국제 지적재산권리(IPRs)법에서 규정한 원칙들을 반영해 동일한 수준에서 규정
- 인터넷 이용확대에 따라 새로운 지식기반 경제의 성장을 돕고 전자상거래와 창의적 형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1999년 8월 저작권법(Copyright Act, Cap 63)을 보완
 -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및 법집행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인터넷 거래 활성화
 - 또한 저작권자, 중간매개자(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등), 저작물 이용자 등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 사용 환경에서의 법적확실성을 제고

3. 전자정부 주요기관

정책/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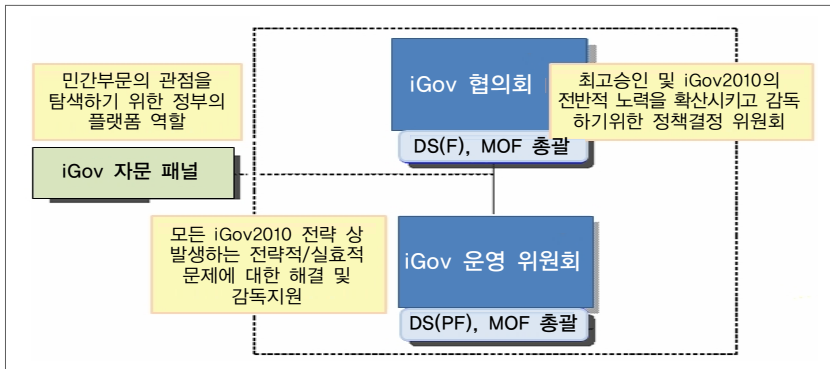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

- 재무부는 전자정부의 소유자(owner)로서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전체 정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관리
- 재무부는 혁신관리계획(MFF) 범위 내에서 전자정부국(e-Government office)을 설치해 전자정부 사업 전반을 감독, 조정 및 촉진하고 있음

전자정부정책위원회(iGov committee, iGov 협의회)

- iGov 협의회는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한 최상위 의결 위원회로 재무장관(Permanent Secretary of Finance)이 의장이며, 각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전자정부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및 전략적 방향 제공
- 재무부 장관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대표로 구성된 iGov 자문 패널을 총괄
 - iGov 자문 패널은 전자정부의 전 세계적 동향과 이것이 싱가포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언하며, 정부에 정책집행 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피드백 제공
- iGov 협의회는 재무부의 부장관(Deputy Secretary of Finance)이 총괄하는 iGov 운영위원회의 도움을 받음
 - iGov 운영위원회는 각 부처의 부장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iGov2010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구현과 관련한 문제들을 감독하고 조직화하는 역할 수행

〈그림 6〉 iGov 위원회



자료 : Singapore E-Government Journey(2008), Singapore IDA

협력·조정

IDA의 정부정보책임관실(Government Chief Information Office, GCIO)

- IDA는 정부정보책임관실을 설립해 각 정부 부처에 있는 정보책임관들 및 ICT 직원들 간의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 도모

정책 이행

정보통신개발청(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IDA)

- IDA는 범정부 정보화책임관(Chief Information Officer, CIO)인 동시에 기술 책임관(Chief Technology Officer, CTO) 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
 - 기술적 조언 및 권고
 - 국가 정보통신기술 정책, 표준, 절차 규정 및 제시
 - 공공 서비스 전반에 걸친 정보통신 기술 마스터플랜 제시
 - 중앙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관리 및 운영
 - 중앙의 정보통신기술 프로젝트 감독 및 관리
 - e-Gov2015 종합계획과 분야별 정보통신 계획 총괄
- IDA는 20여명의 민·관·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한 실무조직으로 구성
 - IDA의 실무조직은 CEO 아래에 7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정보통신 개발그룹, 정부정보화사업단, 기업개발그룹, 정책규제그룹, 중앙기업 서비스그룹, 온라인개발그룹, 기술그룹), 그 아래에 각각의 국(Division)을 두어 업무 수행
 - IDA의 정부정보화사업단(Government Chief Information Office)은 약 4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단일 사무국으로 전자적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별 부처에 전문적인 공공부문 정보기술 수단을 제공하며, 정부발주 정보화사업을 관리

각 부처 (부처장관, 공공기관 및 준공공기관의 기관장)

- 각 부처는 정보책임관과 함께 기관차원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짐
 - 조직차원의 정보통신 기술활용 비전 제시
 - 기관차원에서의 정보통신기술 정책, 표준, 프로젝트, 시스템, 인프라를 중앙정부의 정책, 표준 등과 통일되게 마련

기관별 정보화책임관(Agency CIOs)

- 모든 정부기관은 자신의 조직 내에서 기관 고유의 정보통신 기술, 기반 시설 및 서비스에 책임이 있는 정보화책임관(CIO)을 임명
 - 기관별 CIO들은 부처들의 상임 비서관, 기관의 수석, 법정위원회의 최고 관리자들이 ICT 이용에 대한 조직의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업무요구와 우선순위에 맞게 ICT 정책, 표준, 프로젝트, 시스템, 인프라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e-Gov2015 마스터플랜을 지지하고, IT 전략의 기획 및 우선순위 설정을 돕고,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고 정보통신기술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기 위해 인력 및 금전적 자원을 지원

지원

회계감사원(Auditor General's Office: AGO)

- 회계감사원은 전자정부 사업을 포함한 범부처 정보화 사업 예산 지출에 대한 감사 수행
 - IT 감사는 일반적으로 회계감사(financial statement: FS), 정책순응(compliance) 및 성과감사(Value-For-Money)와 함께 수행
 - 감사결과는 매년 출간되는 '정보기술감사보고서(IT audit brochure)'를 통해 공개
 - ※ 회계감사(FS 감사)는 기관 예산으로 개발된 IT 시스템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신뢰도(reliability)를 평가하는 것이고, 순응감사는 IT사업 추진과 관련해 적절한 법·정책·표준 순응정도를 평가하는 것임. 성과평가는 IT 시스템 사용 및 관리에 있어 과도한 예산지출 및 낭비, 비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작업

미디어 개발청(MDA)

- 미디어개발청은 미디어 부문을 촉진하는 동시에 규제기능 담당

4. 전자정부 서비스

인프라

포털

전자정부 포털(eogv.gov.sg)

- 싱가포르 전자정부 포털은 정부 정보 및 자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된 고객 중심 창구
 - 온라인 포털 산하 다양한 웹사이트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

모바일 전자정부(mGov@SG)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는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모바일 웹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합해 2011년 하반기부터 40개 이상의 모바일 서비스를 'mGov@SG'를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

정부 데이터 포털(data.gov.sg)

- 정부 데이터 포털은 공개 및 활용 가능한 정부의 데이터 셋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사이트로, 2011년 6월 공식적인 서비스 개시
 - 약 5,000여개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

GeBIZ 전자조달 포털(www.gebiz.gov.sg)

- 정부 전자비즈니스(GeBIZ)는 싱가포르 정부의 원스톱 전자조달 포털로 국내외 물품공채는 온라인으로 조달기회를 검색하고 입찰가를 제출할 수 있음

정부상거래창구

(Government Shopfront : shop.yellowpages.com.sg/syp2010/mall/govmall/index.asp)

- 정부상거래창구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원인박스(OnInBox)

- 원인박스는 공식적이고도 신뢰성 있는 원스톱 메일 플랫폼으로 시민들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받고 있는 산발적인 메일과 정보서비스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적시에 간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 2012년 중반부터 IT 기기를 잘 활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2015년 이내에 전체 시민의 1/3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

네트워크

차세대 전국 광대역 네트워크(Next Generation Nationwide Broadband Network : Next Gen NBN)

- 싱가포르의 차세대 전국 정보통신인프라는 초고속의 차세대 전국 광대역 네트워크(Next Gen NBN)와 보급형의 무선 광대역 네트워크(WBN)으로 이루어짐
- 싱가포르 정부는 차세대 전국 광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공 업무의 효율성 증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

SG 프로그램에서의 무선(Wireless@SG Programme)

- Wireless@SG는 차세대 국가 정보통신 인프라 사업의 일환으로써 IDA에 의해 개발된 무선 광대역 프로그램으로 3개 지역 무선 운영업체에 의해 가동
- 이용자들은 무료로 공공장소에서 이음새 없는 무선 광대역 접속을 1Mbps 이상의 속도로 실내와 실외 모두에서 즐길 수 있음

무선 광대역 네트워크(Wireless Broadband Network)

- 싱가포르의 차세대 전국 정보통신 기술은 싱가포르인의 이음새 없는(seamless) 접속을 보장하는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로 구성
- 차세대 전국 광대역 네트워크를 보완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주변 주요 밀집(catchment) 구역에 배치될 것이며,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무선 액세스를 제공할 예정

정부 정보 인프라(Government Information Infrastructure : GOVII)

- 정부정보 인프라(GOVII)는 싱가포르 전자정부의 중심으로 여기에 공공부문, 스마트 카드, 전자정부 메일 시스템, 정부인트라넷 등이 연결되어 있음

전자신원/전자인증

전자신원인증(Unique Entity Number, UEN)

- 전자신원인증은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간기업이 단일한 고유숫자로 정부 기관들에 쉽게 접속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이 사업은 재정부와 상업등록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이 공동 추진

국가 인증 프레임워크(National Authentication Framework, NAF)

- 국가 인증 프레임워크는 iN2015 마스터플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서 싱가포르 통화당국과 재무장관의 지원을 받으며 IDA가 주도
 - 엄격한 인증을 위한 전국가적인 플랫폼으로 사용하게 될 것임

법정부 서비스(G2G)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for Government)

- 정부기관이 더욱 쉽고 빠르게 맞춤형 전산화 리소스를 유치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안전한 ICT 공유 환경을 제공

법정부 전사적 아키텍처(Whole-of-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WoG EA)

- 법정부 전사적 아키텍처는 데이터 저장소를 활용한 정부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업, 기업정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기술 투자로부터 전략적인 기회를 분석하고 발견함으로써 정부의 ICT 자산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도입
 - 정부의 전사적 아키텍처는 2002년 기술적 아키텍처(Technical Architecture)가 설립되면서 시작

표준 운영 환경(Standard Operating Environment, SOE)

- 모든 공무원을 위해 표준화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의 성능이 더욱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
 - SOEasy는 정부 각 기관에 걸쳐 정보의 흐름과 업무량을 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쉽고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정보를 찾고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권한을 부여함

정부 웹 서비스 교환(Government Web Services Exchange)

- 공공부문 상호기관의 통합을 위한 전략적 기술 원동력으로서의 웹 서비스를 통해 정부기관간의 정보 및 서비스의 실시간 공유를 가능케 하는 중앙 플랫폼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

- 37개 기관들이 중요한 지식자원을 파악하고 앞으로 그들의 지식관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제작한 로드맵

국민서비스

전자시민포털(eCitizen Portal, www.ecitizen.gov.sg)

- 정부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접근을 제공해, 시민들은 언제나 정부와 온라인으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호소통이 가능

SingPass(www.singpass.gov.sg/sppubsvc)

- 모든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된 인증시스템

TRUST(trust.yoursingapore.com/trust/DirectorCtrl)

- 싱가포르의 허가된 모든 무역중개사에서 업데이트 되는 모든 공공정보를 제공
 - 관련 해외 또는 지역 무역정보나 싱가포르의 축제와 같은 소비자 행사 정보까지 제공

자선 포털(Charity Portal, www.charities.gov.sg/charity)

- 자선영역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자선단체와 기부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온라인 방문(e-Visitor, www.ica.gov.sg)

- 싱가포르에 방문 및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하도록, 간소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서비스 되는 영역들로 구성된 혁신적인 프로그램

온라인 예약(iCanBook, www.icanbook.com.sg)

- 스포츠 그리고 비-스포츠 분야 모든 시설에 대한 예약 프로그램으로 대중들을 시설을 예약하거나, 교육 등의 과정을 등록하고, 거래를 통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

범정부 서비스 포털(The National Service Portal, NS Portal, www.ns.sg)

- 국가 서비스 포털에서의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중요한 전자 서비스나 정보와 같은 모든 국가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 및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국가 서비스 포털은 싱가포르 모든 국가 서비스에 대한 최초의 통합 포털

온라인 아카이브(Access to Archives Online, www.a2o.com.sg)

- 싱가포르 기록원을 통해 수집한 광범위한 영역의 사진, 지도, 구술사 인터뷰 자료 모음에 대한 검색기능 제공

온라인 시민 공청 포털(Online Consultation Portal, www.reach.gov.sg)

- 정부의 정책제안에 대한 시민의 견해를 듣기 위한 포털

싱가포르 온라인 검색 엔진(Singapore Online Search Engine, www.gov.sg)

- 인터넷에서 정부 차원의 정보 및 서비스 검색에 대한 검색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검색엔진 서비스

온라인 법원 서비스(Subordinate Court System, www.subcourts.gov.sg)

- 오프라인상의 실제 법원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한계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법 관련 전자서비스 제공 및 자력구제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원 서비스 사이트

전자 의료기록 공유(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Exchange, EMRX)

- 싱가포르의 모든 공공 병원과 종합병원의 환자기록을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기업서비스

원맵(OneMap, www.onemap.sg)

-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시의적절하며, 정확한 위치기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지리 정보 플랫폼
 - 싱가포르의 일반적인 기본지도를 구축하고 현 장소에서 관심장소를 검색 및 합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기능 제공

EnterpriseOne(licences.business.gov.sg)

- 기업이 한 번의 온라인 거래로 17개 정부기관에 의해 발급되는 80개의 온라인 비즈니스 라이선서 제품군에서 등록, 업데이트, 갱신 또는 삭제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사이트

Bizfile(www.bizfile.gov.sg)

- Bizfile은 온라인 파일링 및 정보검색 시스템으로 기업에 대한 약 300억 가지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기업가는 싱가포르 세관, 내륙 수익기관, 싱가포르 정부 네트워크 정보 센터 등 여러 기관과의 전자서비스 통합을 통해 물품·용역소비세(GST)를 등록하거나, 그들의 웹 사이트 도메인이나 사용자 계정을 선점 또는 활성화 가능

CORENET(www.corenet.gov.sg)

- 건설업 및 부동산업 네트워크(CORENET)는 업계의 전문가들이 업무 진행과 승인을 위하여 규제 당국에 건설 계획의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호주

Austra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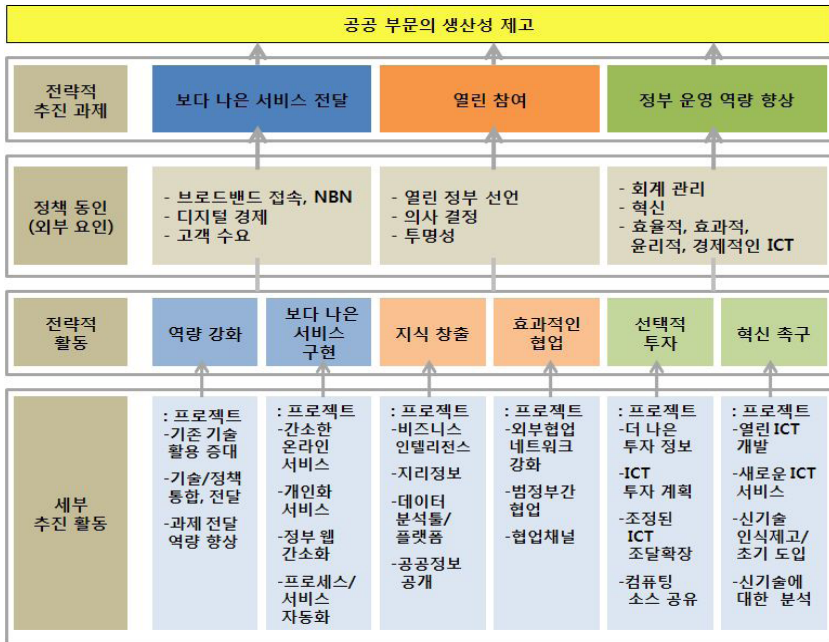
1. 전자정부 전략	31
2. 전자정부 법률체계	38
3. 전자정부 주요기관	40
4. 전자정부 서비스	44
• 인프라	44
• 국민서비스	48
• 기업서비스	49

1. 전자정부 전략

Strategic Vision for the Australian Government's use of ICT (Draft, 2011.4)

- 호주 정부는 공공 부문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제안한 초안 'Strategic Vision for the Australian Government's use of ICT'를 2011년 4월 발표했으며, 최종본 확정을 위해 현재 의견 수렴 중¹⁾
 - 초안은 향후 5년 간 정부의 ICT 이용 방향을 제시
 - 기존의 'ICT 효율성' 중심에서 '향상된 생산성' 중심으로 초점 변화
 - '공공 부문의 생산성 제고' 비전 달성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전달, 열린 참여, 정부 운영 역량 향상'이라는 3대 전략적 우선 추진 분야 제시

〈그림 1〉 호주의 ICT 전략 비전과 추진과제



출처 : NIA(2011.5), '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한 신 국가정보화전략 분석 ②-호주'

1) 2011년 6월 이후 최종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최종본은 발표되지 않음

Government Response to the Report of the Government 2.0 Taskforce 'Engage: Getting on with Government 2.0'(2010.5)

○ 호주 정부는 Gov 2.0 T/F에서 제안한 13개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힘

4대 아젠다	13개 권고안	호주 정부 의견
거버먼트 2.0 기반 조성	1. 열린 정부로의 전환 선언	수용
	2. 범부처 간 리더십, 지침 및 지원 조율	수용
온라인 시민 참여 촉진	3. 정부 온라인 참여 활성화 도모 위한 관련 지침 개정	수용/ 원칙 수용
	4. 공무원들의 온라인 참여 촉구	수용
	5. 공무원 및 개별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수립	수용
공공 정보 관리	6. 공공정보의 개방성, 접근성, 재사용성 추구	수용/ 원칙 수용/ 수정 후 수용
	7. 지적재산권 운영에 관한 이슈제기 및 해결방안 모색	수정 후 수용/ 수용 불가
	8. 정보 공개 위한 관련 법제 및 프레임워크 수립	수용
열린정부를 위한 정책결정 요인 개발	9. 웹 2.0 톨에 대한 접근성 보장	수정 후 수용
	10. 웹 2.0과 보안 이슈 해결	수용
	11.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와 공공정보의 기밀성 간 균형 유지	수용
	12. 호주 정부 기록의 개념 및 범주 정의	수용
	13. 정보 자선의 장려	추후 논의

○ 호주 정부는 2010년 7월, 공공 부문의 개방, 투명성, 참여 문화를 창출하는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선언

- 'informing, Engaging, Participating'의 3대 원칙 발표

Engage: Getting on with Government 2.0(2009.12)

○ Gov 2.0 T/F는 '리더십, 참여, 공공정보로의 열린 접근'이라는 Gov 2.0 3요소를 중심으로 4대 아젠다 13개 권고안을 제안

- 21세기 새로운 국정 운영의 모델로 웹 2.0 등 협력 지향적이고 개방적인 신기술을 활용한 참여를 기반으로 보다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효율성 높은 정부 체계 구현 목표²⁾

2) NIA(2011.5), '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한 신 국가정보화전략 분석 ②-호주'

Responsive Government: A New Service Agenda(2006. 3) - 3단계 전자정부 전략

- 2006년 새로운 전자정부 전략인 'Responsive Government: A New Service Agenda'에서 선도적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Vision for 2010' 발표
- 4대 전략적 추진분야는 다음과 같음
 - 이용자의 요구 충족 : 보안 및 프라이버시, 이용자 요구와 선호 측정, 호주 정부 엔트리 포인트, 이용자 계정과 개인화된 서비스, 가시적이고 추적 가능한 서비스, 서비스 제공 옵션에 대한 이용자 인식 증대, 정부로의 온라인 참여
 -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 : 개혁과 변환(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과정 재설계), 시스템 아키텍처
 - 투자에 대한 가치 창출 : 강력한 투자 프레임워크 개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인 'Gateway' 도입, 기관 내부 및 기관 간 시스템의 재사용과 공유
 - 공공부문 역량 강화 : 서비스 역량과 성숙도 측정, 기술 개발, ICT 조달, 안전한 신원확인 관리 프레임워크, 전자정부 관련 법적 장애물 규명 및 제거

○ 각 목표의 단계별 추진내용

목표	목표 구분	현재(2005~2006)	초기단계(2006~2008)	완성단계(2008~2010)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온라인 정보 접근성	- 정부정보 온라인 공개 확대	- 모든 채널을 통해 접근 가능	- 민간 ISP를 통한 서비스 제공
	정부 웹서비스	- 정부와의 편리한 인터페이스 제공	- 대표포털로 접속 - 개인계정 제공	- 개별 특성에 맞는 개인 계정 제공
	정보 공유	- 상호연계부족으로 국민과 부처별 거래	- 1회 개인정보 변경으로 부처간 정보공유	- 민간 ISP와 연계
연계된 서비스 제공	정부부처간 연계성	- 부분적 연계 서비스 제공	- 부처간 연계 서비스 형상(pathway project)	- 부처간 서비스 및 민간포털 연계
투자에 대한 가치창출	ICT 기술 투자	- 부처별 투자계획 수립	-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및 투자체계 정비	- 체계적인 투자 프로세스 마련
	ICT 투자 효율성	- 타 부처 시스템의 재사용 미흡	- 정부시스템 재사용을 위한 저장소 구축	- 정부기관 시스템 재사용 확대
공공 부문 역량 강화	공공 부문 역량 평가	- 공공서비스에 축적된 역량 평가 필요	- 장단점 분석 및 성과 평가 계획 수립	- 개선사항 발굴, 평가 및 피드백 제공

출처 : NIA(2011.5), '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한 신 국가정보화전략 분석 ②-호주'

Australia's Strategic Framework for Information Economy 2004~2006: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he Information Age(2004.7)

- 1998년 'A Strategic Framework for Information Economy' 발표 이후 정보경제의 환경과 도전이 변화됨에 따라, 정보경제 선도국으로서 호주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필요한 정책 플랫폼 제시
- 선도적인 정보경제 국가가 되기 위한 2004-2006년까지의 4대 정책 목표, 4대 우선 추진 분야, 16개 전략 제시
- 4대 정책목표
 - 특정 부문과 지역이나 집단이 변화로 인해 소외되지 않음을 보장함으로써 견고한 커뮤니티와 사회통합을 촉진
 -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호주의 정보경제를 보호하고, 신규 글로벌 정보 경제에서 호주의 이익 촉진
 - 정보경제 발전의 장애물 제거
 - 시민 참여, 효율성, 서비스 제공 효과성의 증진을 위한 ICT 이용에 있어 모범
- 4대 우선 추진분야
 - 호주 국민들이 정보경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 네트워크, 톨을 갖도록 보장
 - 호주의 정보 인프라의 보안과 상호운용성 보장 및 디지털 서비스에서의 신뢰 지원
 - 생산성 향상과 산업 전환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호주의 혁신시스템 개발
 - 정보, 지식, ICT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공공 부문의 생산성, 협업, 접근성 향상
- 4대 우선 추진분야 중 하나인 '정보, 지식, ICT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공공 부문의 생산성, 협업, 접근성 향상'의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책임성, 효율성, 투명성 및 통합성을 보장하는 지배영구구조 개발
 -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호주 정부의 ICT 투자와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개발
 - 정보 및 지식의 창조·공유·보호·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범정부 간 협업

Better Services, Better Government(2002. 11)

- 2단계 전자정부 전략

-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1단계 전략에서 더 나아가 정부의 정보, 서비스 제공, 행정 등에 IT의 포괄적·통합적 적용으로 확대
- 2001년까지 정부서비스의 온라인 전환 완료 이후, 새로운 단계의 전자정부 6대 목표 설정
 - 효율성 및 투자 대비 성과 극대화 : 효율성 향상, 투자 대비 성과 평가
 - 정부 서비스 및 정보로의 편리한 접근성 보장 : 다양한 서비스 채널의 관리, 정보 및 서비스로의 편리한 접근을 위한 더 나은 툴의 개발
 - 이용자 요구에 응답하는 서비스 제공 :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하나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 가능한 서비스들을 위한 기반 확립
 - 관련 서비스 통합 : 공통서비스 제공 아키텍처 및 거버넌스 구축, 고객 대응성을 증진하는 정부 구조의 확립, 범정부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 전략의 개발
 - 신기술 사용에 있어 이용자 신뢰 구축 : 웹사이트 표준화를 통해 신뢰 향상 (메타데이터, 접근성, 인증, e-영속성)
 - 정책형성 및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Government Online(2000.4) - 1단계 전자정부 전략

- Government Online은 1997년 'Investing for Growth' 성명, 1998년 'A Strategic Framework for Information Economy' 이후 추진된 정부 온라인화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음
 - 1997년 이후 정부기관 서비스의 온라인화가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정보 및 서비스의 온라인화에 대한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계획 필요
- Government Online은 연방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기조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전자정부 추진 상세계획을 담고 있음
- Government Online의 목표
 - 누구나 24시간 이용 가능한 가상환경에서의 정부서비스

- 고품질, 저비용의 온라인 서비스
- 쉽게 이용가능하고, 국민들이 정부와 상호작용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
- 국민과 더 가까운 정부

○ 8개 전략적 우선추진 영역

- 기관들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이를 위해 온라인 액션플랜 수립, 이행과정 보고체계 수립, 온라인 정보서비스 의무 논의)
- 지원·촉진 인프라(이용자 신뢰: 인증, 프라이버시, 보안/원칙과 표준: 메타 데이터 표준, 전자출판 및 기록 보존 가이드라인, 접근성)
- 지방의 Government Online 강화(소외 지역의 정부정보 접근가능성 강화 등)
- Government Online 이니셔티브의 IT산업 발전 영향력 강화(산업계를 위한 정보화 지침 제공 등)
- 정부 비즈니스 활동 온라인화(정부 전자결재 및 전자구매 시스템 구축 등)
- 모범사례와 진행상황 점검(온라인 액션플랜 공개 및 웹사이트를 통한 진행 내용 업데이트)
- 정부기관 간 공동 서비스 촉진
- 이해관계자 간 소통

A Strategic Framework for Information Economy(1998. 12)

- 1997년 'Investing for Growth' 성명 이후에 최초로 발표된 호주의 정보경제에서의 비전과 국가적 차원의 프레임워크로, 10개 중점추진분야에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정부서비스 제공 추진' 포함
- 'A Strategic Framework for Information Economy' 10개 중점추진분야
 - 호주 국민들이 정보경제의 혜택을 누릴 기회의 극대화
 - 호주 국민들이 정보경제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기술을 전파
 - 정보경제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성장
 - 호주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이용 증가
 -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 정보경제에서 호주의 콘텐츠와 문화의 통합과 성장을 촉진
 - 호주 정보산업의 발전
 - 의료건강 부문의 가능성 열기
 - 최근 만들어진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 규칙과 협약에 영향
 -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정부서비스 제공 추진

- 전자 정부 관련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2001년까지 정부 서비스의 온라인 전환, 연방정부 정보센터 설치, 정부사업·조달시스템의 온라인 전환, 정부서비스 전달의 가시성, 접근성, 능률성 개선에 온라인 환경 활용 등이 있음

Investing for Growth(1997. 12)

- 1997년 존 하워드 총리는 호주의 경제적·사회적 발전과 정부의 정보경제 전략을 연계시킨 'Investing for Growth' 성명 발표
- 성명에 포함된 주요 이니셔티브
 - 강력한 정보 경제 리더십과 국가 차원의 정보경제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A National Strategic Framework for Information Economy) 개발
 - 민간 부문이 선도하는 정보경제의 개발을 지원하고 장려할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듦으로써 비즈니스 및 소비자 신뢰 창출
 - 2001년까지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통한 정부 온라인 서비스 이용 장려
- 호주의 전자정부 전략은 'Investing for Growth'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전자정부 관련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1년까지 연방정부 서비스의 온라인화(기존의 문서, 전화, 팩스, 대민 서비스 등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보완하는 차원)
 - OGO(Online Government Office)를 통해 정부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창구로 정부정보센터 구축
 - 2000년까지 연방정부 지불 수단으로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 안전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정부기관을 포괄하는 인트라넷 구축

2. 전자정부 법률체계

전자정부법

- 현재까지 전자정부에 관한 단독 법은 없음

관련 법령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 호주 연방정부 및 기관의 공식문서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을 부여한 법률 (1982년 12월 발효, <http://www.comlaw.gov.au/Series/C2004A02562>)
- 시민들에게 다음의 권리 부여
 - 연방정부 및 기관에 의해 작성된 서류 열람
 - 불완전하거나, 기한만료, 잘못된 정보에 대한 변경 요청
 -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개인기록 수정 및 주석첨가를 거부하는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

Freedom of Information Amendment (Reform) Act 2010

- 정보 접근 및 기타 관련 목적에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법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0A00051>)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Act 2010

-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의 설립과 관련 목적을 위한 법률(<http://www.comlaw.gov.au/Details/C2012C00126>)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1988)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제정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률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2C00217>)
- 연방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주 및 지역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체제도 있음

- 연방 공공부문을 위한 11대 정보 개인정보보호 원칙 및 민간 부문 조직을 위한 10대 국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제공. 이 개인정보보호 원칙은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 품질 및 안전기준의 설정 등 모든 단계에 적용됨.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에의 접근권, 수정권을 부여

Information Privacy Principles(under the Privacy Act 1988)

- 개인정보의 수집방식 및 목적, 개인정보의 요청, 개인정보의 저장 및 보안, 개인정보 포함 기록에 대한 접근 등에 대한 11대 원칙
(<http://www.privacy.gov.au/materials/types/infosheets/view/6541>)

National Privacy Principles

- 수집, 이용 및 공개, 정보 품질 및 보안, 개방, 접근 및 수정 등에 대한 10대 원칙(<http://www.privacy.gov.au/materials/types/infosheets/view/6583>)

전자상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 (Cth))

- 전자상거래의 촉진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
 - 규제가 아닌 촉진을 주목적으로, 전자상거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규제 프레임워크 제공
- 소비자 보호 및 보안과 같은 광범위한 공공 정책 목표를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할 경우 개입(<http://www.comlaw.gov.au/Details/C2011C00445>)
- 이외에도 Electronic Transactions Regulations 2000 (Cth)도 있음
(<http://www.comlaw.gov.au/Details/F2011C00367>)

조달(Procurement)

- 관련 법제로는 The Constitution, Public Service Act 1999, Crimes Act 1914, Auditor-General Act 1997, Appropriation Acts, Commonwealth Procurement Guidelines 등이 있음

Public Service Act 1999

- 호주 공공서비스의 구축·관리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2C00319>)

Telecommunications Act 1997

-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2C00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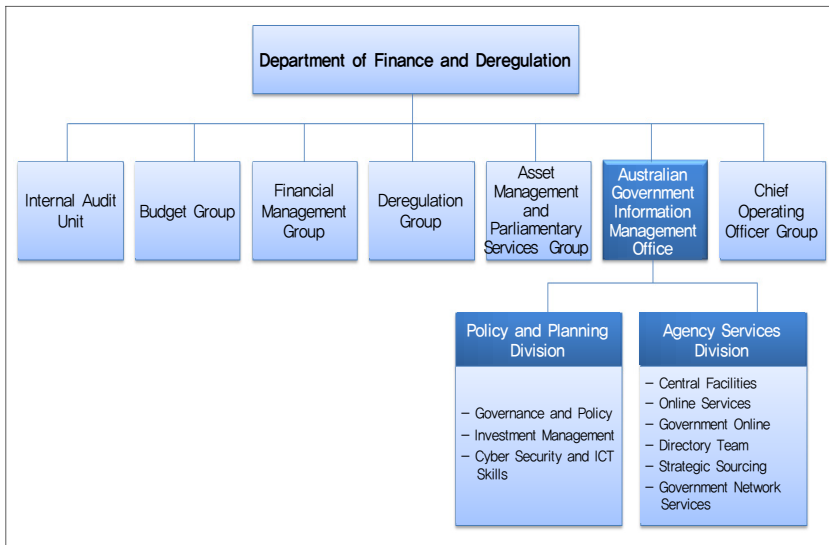
3. 전자정부 주요기관

정책·전략 수립 및 이행

재무·규제완화부(DFD,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호주정부정보관리실(AGIMO, 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 (2004-현재) 호주는 전자정부 추진 초기인 1997년부터 전자정부 주무부처와 담당기관의 추진체계를 수립. 현재는 재무·규제완화부(DFD,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내 호주정부정보관리실(AGIMO, 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이 담당하고 있음
- 2004년 4월 정보경제국(NOIE, National Office for the Information Economy)의 업무 중 전자정부 및 정보관리 관련 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호주정부정보관리실(AGIMO, 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을 재무·규제완화부(DFD) 내에 신설³⁾

〈그림 2〉 호주 재무·규제완화부(DFD) 조직도



출처 : <http://www.directory.gov.au>

3) NOIE의 기존 업무 중 정보경제정책, R&D, 프로그램 개발 등은 DCITA에 남고, 전자정부 업무는 DFD 내 AGIMO가 담당

〈표 2〉 호주정부정보관리실(AGIMO)의 주요 역할 및 책임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전략적 비전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 등 범정부 ICT 전략 개발 - 범정부 거버넌스 및 관할권 조정 - 거버먼트 2.0 어젠다. 거버먼트 2.0 스티어링 그룹의 장 - APSC와 제휴 하에 범정부 전략적 ICT 인력 계획 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정부 통신 네트워크(ICON) - FedLink 와 Ministerial Communications Network - 특화된 ICT 서비스 금융 - 안전한 통신 서비스 - .gov.au 웹 도메인 명명 - directory.gov.au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 전화, 관리 서비스,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 데스크톱 하드웨어 - Microsoft 라이선스 - 데이터 센터 시설 및 관련 서비스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투자 관리 - 인터넷 게이트웨이 감소 프로그램 및 사이버 보안 전략 관련 - 데이터 센터 전략 2010-2025 - 기관간 데스크톱 표준화 위한 일반적인 운영 환경 정책 - ICT 담당직원 텔레 워킹 정책 - 정부의 ICT 준비 옴트아웃 정책 - 인터넷 주소 IPv6 전환 정책 - 오픈소스 등 소프트웨어 개발 정책 - 정부와 산업계의 협업 촉진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stralia.gov.au - data.gov.au - govspace.gov.au - govdex.gov.au - eGovernment Awards - entry-level ICT programs
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정부 아키텍처 등 개선되고 통합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레임 워크 - 보안 및 인증 기준 - 호주의 인터넷 및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 웹 게시 및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2001-2004년) 2000년 말 정보경제실(NOIE)의 기능을 확대하며 정부온라인 추진실(OGO, Online Government Office) 기능을 정보경제실(NOIE)로 통합
 - 정보경제실(NOIE)은 온라인 서비스와 정보경제발전에 대한 책임 집행 기관으로 정보경제, 전자상거래, 접근성 및 평등성, 국제업무, 온라인 정부, 이용자 신뢰구축, 정보경제 관련 정부활동 조정업무 등을 담당

- 전자정부 관련 담당업무로는 전자정부 전략, 온라인 표준 설정, 전자상거래 및 전자조달 전략 추진 등을 담당
- (1997-2000년) 전자정부정책 총괄주무부처를 정보통신예술부(DCITA, Department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로 전환⁴⁾
 - 1997년 정보통신예술부(DCITA) 내 정보경제실(NOIE) 신설
 - 1995년부터 유지된 정부정보기술실(OGIT, Office of 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을 1997년 정보통신예술부(DCITA)로 이관하며 정부온라인추진실(OGO, Office for Government Online)로 개편
 - 1997년 이후 정보경제실(NOIE)과 정부온라인추진실(OGO)의 이원체제로 전자정부 관련 정책 추진
- ※ 정보경제실(NOIE)은 전자상거래, 온라인서비스, 인터넷, 전자정부 포함한 지식경제 전반의 총괄기관, 정부온라인추진실(OGO)은 범정부적 수준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제공을 중심으로 한 전자정부 구현 담당기관

협력

ICT 거버넌스 위원회(SIGB, The Secretaries' ICT Governance Board)

- 2008년 11월 ICT 개혁 어젠다 실행을 관장할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로 ICT 거버넌스 위원회(SIGB)를 승인. ICT 거버넌스 위원회(SIGB)는 이전의 SCICT (Secretaries' Committee on ICT)를 대체함
 - ※ SCICT(Secretaries' Committee on ICT)는 2006년 6월에 발족되었으며, 전신은 2002년 발족된 IMSC(Information Management Strategy Committee)
- ICT 거버넌스 위원회(SIGB)는 지출심사위원회(ECR, Expenditure Review Committee)에 보고하며, 정부의 ICT 개혁 아젠다를 도출
- ICT 거버넌스 위원회(SIGB) 의장은 재무·규제완화부(DFD)의 장관이며, 주요 부처 및 기관의 장들 및 ICT 부문 외 기업의 장들로 구성
- ICT 거버넌스 위원회(SIGB)는 기술 또는 기술적 이슈들이 아닌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며, 장관에 의해 결정된 정책과 비전을 지원할 범정부 전략을 설정하는 권한이 있음

4) 이전에는 재무행정부(Ministry of Finance and Administration)에서 총괄

- ICT 거버넌스 위원회(SIGB)는 CIOC(Chief Information Officer Committee)와 CIOF(Chief Information Officer Forum)의 지원 받음

CIOC(Chief Information Officer Committee)

- CIOC는 주요 기관, 부처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CIOs(chief Information Officers)의 위원회로, 의장은 호주정부 CIO임
- ICT 거버넌스 위원회(SIGB)와 정부의 정책 아젠다에 맞추어 ICT 이슈와 해결책, 그리고 범정부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트렌드를 조사함으로써 ICT 거버넌스 위원회(SIGB)의 ICT 전략 비전 수행을 지원
- CIOC는 정부의 ICT 이용에 영향을 미칠 이슈를 예측, 워킹 그룹을 통해 CIOC는 특정 ICT 프로젝트를 수행

CJCIOC(Cross Jurisdictional Chief Information Officers' Committee)

- 호주 정부, 뉴질랜드 정부, 주정부 및 지역정부의 관리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멤버들은 각 정부를 대표하여 ICT 정책 및 전략을 조정

※ CIOs(chief Information Officers) 또는 그와 동등한 각 주정부, 지역정부 관리, 호주지역 정부협회 대표자로 구성됨. 뉴질랜드는 참관인(observer)으로 참여. 의장은 호주정부 CIO임

- CJCIOC는 OCC(Online and Communications Council)에 보고하며, 관할권에 관련된 전자정부 이슈를 논의. CJCIOC 정부의 모든 분야에 있어 정부 간 ICT 국가 전략적 접근의 구현에 리더십을 제공

※ OCC(Online and Communications Council)는 호주정부위원회(COAG,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의 새로운 위원회 시스템 도입으로 2011년 6월 해체

CIOF(Chief Information Officer Forum)

- CIOF는 협의 및 정보 공유 포럼으로 CIOC에 포함되지 않은 CIOs의 소규모 기관들로 구성되며, CIOC와 ICT 거버넌스 위원회(SIGB)에 의견 제시
- ICT 거버넌스 위원회(SIGB)가 정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 CIOC로 대표되지 않는 기관들의 관점에서 의견 제시, 더 나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ICT를 이용하면서 직면한 주요 전략적 이슈들에 대한 정보 공유, 협업 기회 추구 등이 목표

4. 전자정부 서비스

인프라

포털

australia.gov.au

- 호주 정부의 포털로 약 900여개의 호주 정부 및 일부 주·지역 정부 웹사이트의 정보와 서비스를 연결해 주며, 약 400만개 이상의 호주 정부 및 주·지역 정부 웹페이지 검색 가능
- 재무·규제완화부(DFD)가 이 사이트의 개발 및 운영 관장

data.gov.au

- 정부 2.0 T/F(Government 2.0 Taskforce)에 따라 2009년 개설된 베타버전 data.australia.gov.au은 종료됨
- 호주 정부 및 주·지역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쉽게 검색, 접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 사이트의 주요 목적은 오픈 라이선스 하에 유용한 형태로 정부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접근과 재사용을 권장하는데 있음
- 현재 111개 기관에서 제공한 860개의 데이터셋을 이용할 수 있으며, 16개의 앱이 있음. 정보제공방식은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하거나 해당 링크를 걸어 주는 방식. 제공되는 데이터의 양과 질의 향상을 위한 작업은 계속 진행 중
- Data.gov.au는 시민들이 원하는 데이터셋을 제안하고, 데이터셋에 대한 평가와 의견 개진 및 사이트의 개선을 위한 피드백, 직접 생산한 매쉬업, 또는 데이터 기반 이니셔티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
- Data.gov.au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셋 호스팅을 지원하고 있음
- 재무·규제완화부(DFD)가 사이트의 개발 및 운영을 관장함

네트워크

FedLink

- 호주정부정보관리실(AGIMO)에서 관리하는 연방부처와 기관을 연계하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 Virtual Private Network)로, 호주 정부기관 간 보안 커뮤니

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혁신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솔루션

- 2004년 4월 호주 정부는 정부기관들이 데이터 전송 보안을 위해 FedLink 또는 그에 준하는 보호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
- 2011년 6월 PSPF(Protective Security Policy Framework)가 발표됨에 따라 2012년 7월까지 새로운 보안 분류체계에 따른 업데이트 완료 예정

Intra Governmental Communications Network(I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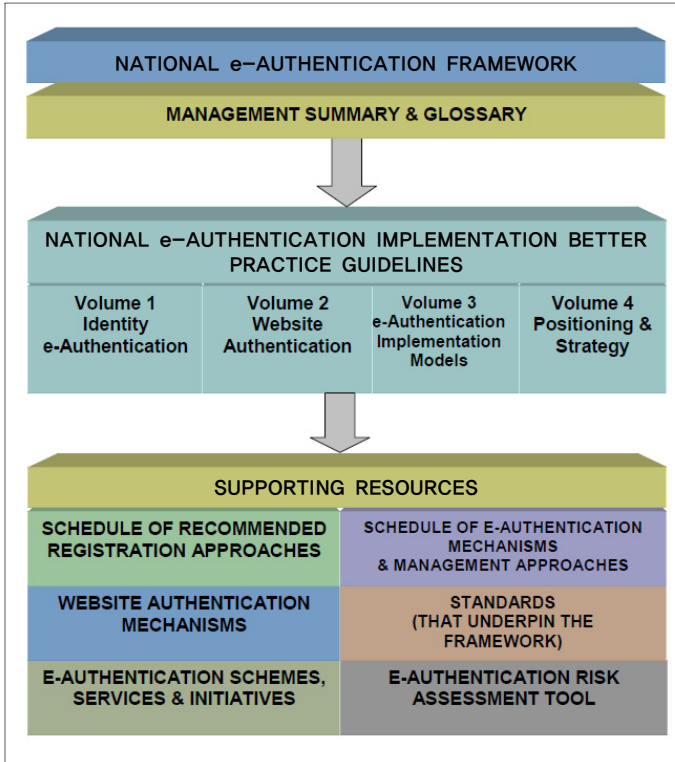
- 캔버라에 위치한 호주 정부기관을 위한 두 지점 간의 전용 링크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 지점 간 광케이블(dark fibre) 연결을 지원함으로써 기관 내부 및 기관 간 커뮤니케이션을 지원
- 재무·규제완화부(DFD)과 호주정부정보관리실(AGIMO)가 ICON 서비스의 정책 및 전략 개발 담당

전자신원/전자인증

National e-Authentication Framework(NeAF)

- 기업을 위한 전자인증 프레임워크(the Australian Government e-Authentication Framework for Business)와 개인을 위한 전자인증 프레임워크(Australian Government e-Authentication Framework for Individuals)를 통합한 것으로, 2008년 12월 OCC(Online and Communications Council)의 승인을 받아 2009년 1월 발표됨
- NeAF는 개인 및 기업의 아이덴티티 전자인증 및 정부 웹사이트의 인증을 포괄
- NeAF의 비전은 커뮤니티가 쉽고 안전하게 정부와 거래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자 환경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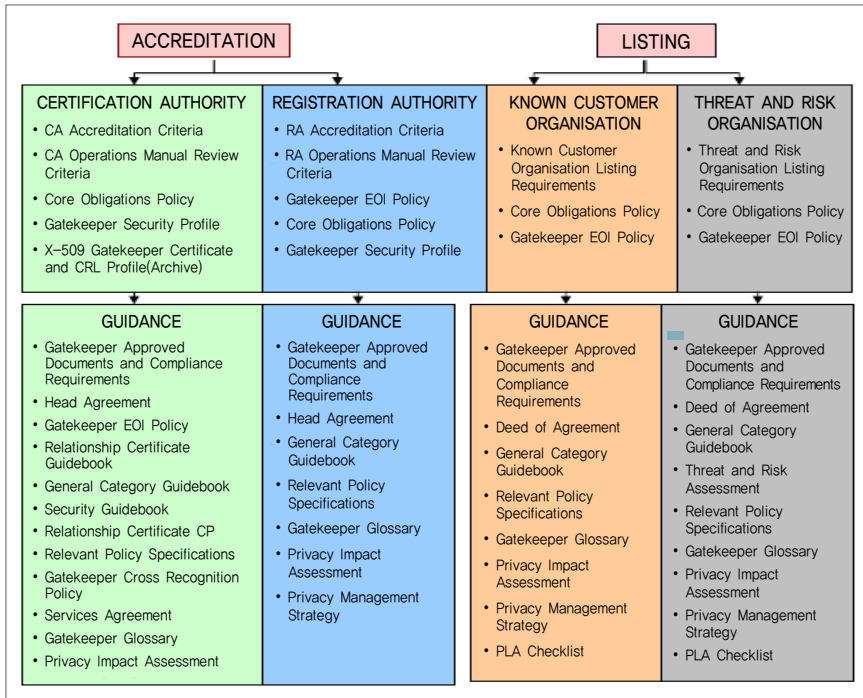
〈그림 3〉 National e-Authentication Framework(NeAF) 구성



Gatekeeper(Public Key Infrastructure)

- 게이트키퍼(Gatekeeper)는 온라인 정부 서비스 제공 시 공개 키 기반(PKI, Public Key Infrastructure)을 활용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전략
- 정부온라인추진실(OGO)은 공개 키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거래에 있어 정부 기관 간 공동이용가능성·인증·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8년 게이트키퍼(Gatekeeper) 구축
- 2006년 재무·규제완화부(DFD)와 호주정부정보관리실(AGIMO)은 'Gatekeeper PKI Framework' 발표. 이 프레임워크의 목표는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보다 간단하고, 더 저렴하게 PKI를 적용하는 것

〈그림 4〉 게이트키퍼(Gatekeeper) 구성



전자조달

AusTender(<https://www.tenders.gov.au/>)

- 호주 정부의 조달 정보 시스템(입찰 및 계약 공고)

※ 호주는 각 연방정부기관 및 주·지방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자체적, 개별적으로 조달을 하는 분산조달방식을 채택. 재무규제완화부(DFD)가 조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기타

govspace.gov.au

- govspace는 정부기관을 대신하여 블로그 및 기타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govspace를 이용함으로써 기관들은 인프라와 관련된 이슈들은 신경쓰지 않고 콘텐츠와 온라인 참여에만 집중
- 현재 govspace를 이용한 52개 블로그와 사이트가 있음
- 재무·규제완화부(DFD)가 사이트 개발 및 운영을 관장

govdex.gov.au

- 위키 기반의 govdex는 정부 간 협업 지원
 - 안전하고 개인적인 웹 기반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기관들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문서 및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 웹 2.0 기술을 적용하여 이용자 친화적이고 협업의 편의성을 강화한 새로운 버전의 govdex를 2012년 3분기에 선보일 예정

국민서비스

Centrelink.gov.au

- ‘Commonwealth Services Delivery Agency Act 1997’에 근거하여 1997년 7월 설립
- Centrelink는 DHS(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산하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호주 정부가 국민(개인/기업/커뮤니티 등)에게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
 - 특히 퇴직, 실직, 가족, 보호자, 부모, 장애인, 원주민, 다양한 문화 및 언어 배경을 가진 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2010/11 annual report에 따르면, 파트너 정책 부처 및 기관은 29개, 이용자는 710만명, 평균적으로 5일 이내 97%의 불만 해결

Visa Wizard(<http://www.immi.gov.au/visawizard/>)

- DIAC(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가 고안한 셀프 서비스 툴로, 관광객이나 이민자들이 그들의 비자 옵션에 관한 정보 제공

Citizenship Wizard(<http://www.citizenship.gov.au/citizenshipwizard>)

- DIAC(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가 고안한 셀프 서비스 툴로, 시민 개개인의 상황 정보를 입력하면 각각에 맞는 시민권 관련 정보 제공

Passport(<https://www.passports.gov.au/Web/index.aspx>)

- 온라인으로 호주여권을 신청, 갱신, 혹은 분실 도난 신고가 가능하며, DFA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가 관할

JobSearch(<http://jobsearch.gov.au/default.aspx>)

- 호주 정부에 의해 무료로 운영되는 대표 온라인 구직구인 웹사이트로, 구인자들이 직접 구인정보를 올리고, 구직자들은 주/지역/직업별 카테고리에 따라 정보 검색 가능

Trove(<http://trove.nla.gov.au/>)

- Trove는 온라인으로 가능한 자료, 호주 도서관, 문화기관, 연구컬렉션 등을 연결해 주는 국립도서관의 검색 서비스로, 2010년 기준 약 1억2천만건의 아이템 연결

기업서비스

Business.gov.au

- BEP 이니셔티브(Business Entry Point Initiative) 추진으로 1998년 구축된 기업 서비스 정부포털
- 창업, 납세, 인가, 고용 등 기업 전반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vs 기업의 단일접점 서비스로, 이용자들은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제공받고, 다부처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 가능

일본

European Union

1. 전자정부 전략	53
2. 전자정부 법률체계	57
3. 전자정부 주요기관	61
4. 전자정부 서비스	65
• 인프라	65
• 국민서비스	68
• 기업서비스	70

1. 전자정부 전략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전략(新たな情報通信技術戦略)

- 2009년 9월 정권교체 이후 2010년 5월 11일 수립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전략',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전략 로드맵(2010년 6월 22일)'에 따라 행정분야의 ICT 활용과 이에 따른 업무 및 제도 검토 추진
- 전자정부 추진목표
 - 일본의 수준 높은 정보통신 인프라와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력을 살리면서, 국민ID제도 도입을 비롯하여 행정사무 수행에 있어서의 정보통신 기술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여, 국민과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편리성 향상, 행정이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혁신 실현
 - 외국의 선행된 성과를 참고로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행정 국가 실현
- 전자정부 추진의 기본적인 관점과 방향성
 - **이용자 관점** : 전자행정추진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추진
 - **비용 대 효과 관점** : 전자화에 있어서의 효과를 명확히 하고 비용대 효과의 관점에서 검토 실시, 민관을 포함한 IT의 전체적인 최적화의 확보에 유의
 - **제도와 업무 자체의 재검토** : 전자화 이외의 행정수법도 조합시킨 종합적인 시점을 가지는 동시에, 비전자적 처리를 전제로 한 기존의 룰·업무 프로세스 등에 구애 없이 업무 프로세스와 제도 자체를 재검토
 - **중앙정부와 지방의 협력** : 이용자 시점의 전자행정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지방 공공단체의 자주성을 존중하여 중앙정부와 지방 공공단체가 협의하고 전자행정을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 정비
 - **민간과의 연계** : 민간 서비스 활용 등에 관해 민간기업 등과의 연계를 촉진. 민간 서비스의 활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보 보안의 확보 등에 유의
 - **PDCA(Plan, Do, Check, Act)의 철저한 추진** : 사업 추진과 IT 투자에 있어, 사전의 목표설정과 진척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사후평가 등을 실시. 개선점을 적절히 반영

전자정부 구축계획(2003) (電子政府構築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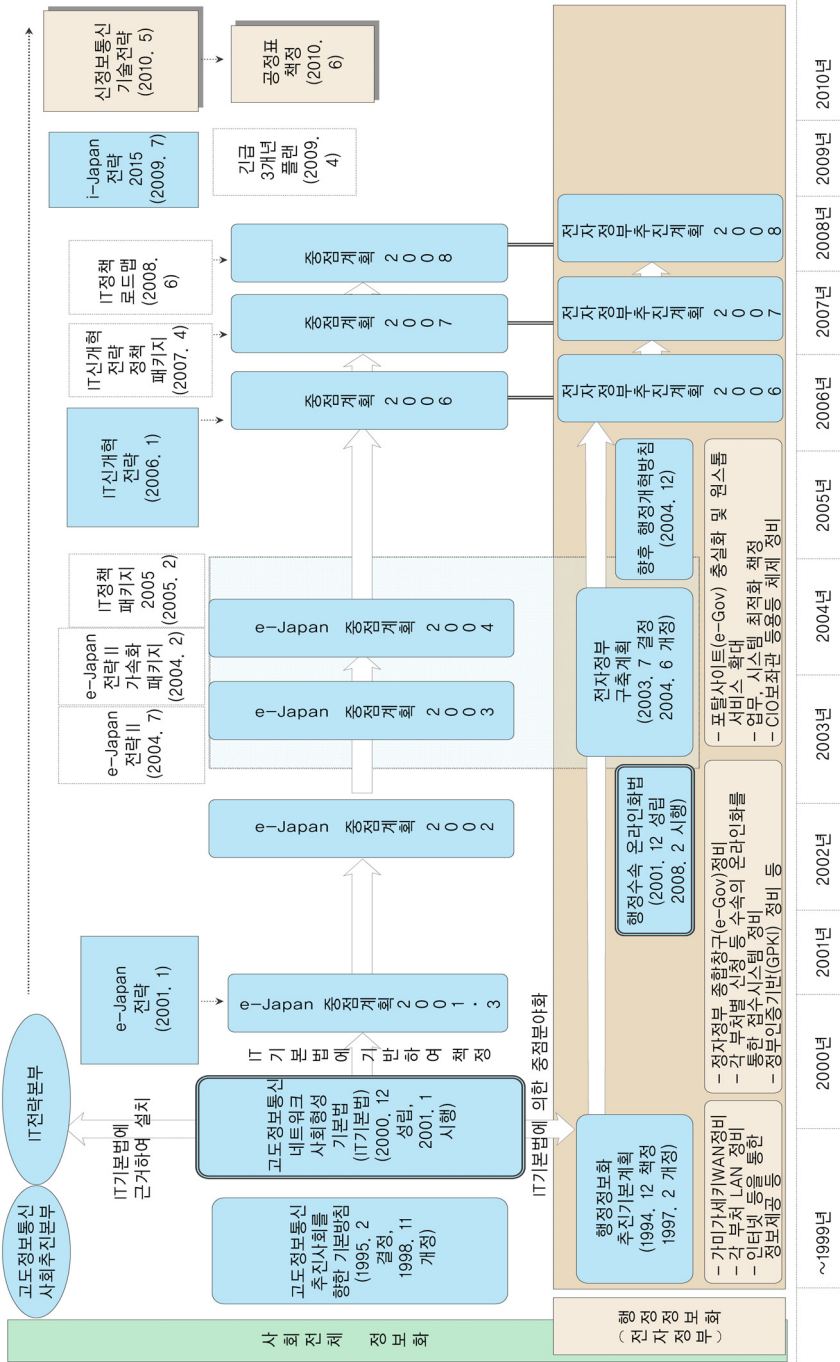
전자정부 추진계획(2006, 2007, 2008) (電子政府推進計劃)

- 이용자 입장에서의 행정서비스 제공, 간단하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을 목표로 '전자정부 구축계획 2003'이 2003년 7월 17일 수립(2004년 6월 14일 일부개정)
- 2006년 8월 31일 '전자정부 추진계획 2006' 수립
- 2007년 8월 24일 '전자정부 추진계획 2007' 수립(2008년 12월 25일 일부개정)

행정정보화 추진 기본계획(行政情報化推進基本計劃)

- 가장 초기의 일본 전자정부 움직임은 '행정정보화추진계획(1994년 12월 25일 수립, 1997년 12월 20일 개정)'으로 1995년에서 2002년까지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및 신청의 전자화 등 행정정보화를 추진하였으며, 가미가세키WAN 정비 등 행정정보화추진을 위한 기반정비 추진
- 전자정부란 행정내부 및 행정과 국민, 사업자 간의 서류 베이스, 대면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온라인화하고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각 부처 횡단적, 국가/지방 일체적으로 정보를 공유, 활용하는 새로운 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2000년 11월 27일 IT 전략회의 결정)
 - 일본은 행정수속의 온라인화 촉진,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추진, 업무/시스템 최적화, 행정시스템과 관련된 정부조달 개선, 정보 시큐리티 대책 등의 정책 추진
 - 2001년 작성된 IT기본전략(e-Japan 전략)을 통해 전자정부 실현이 중심과제로 채택

<그림 1> 일반 전자정부 추진경과



〈표 1〉 주요 IT전략 추진 경과

- 1994. 8. 2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본부」를 내각에 설치
- 1994.12.25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
- 1995. 2.21 고도정보통신사회를 향한 기본방침
- 1999.12.19 밀레니엄프로젝트(새천년 프로젝트)
- 2000. 7. 7 「정보통신 기술전략본부」를 내각에 설치/IT전략회의 설치
- 2000.11.27 「IT기본전략」 책정
- 2000.11.29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 기본법」(IT기본법) 성립
- 2001. 1. 6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IT전략본부) 설치
- 2001. 1.22 「e-Japan전략」
- 2001. 3.29 e-Japan중점계획
- 2001. 6.26 e-Japan2002 프로그램
- 2001.11. 7 「e-Japan중점계획, e-Japan2002프로그램의 가속화 · 앞당김」
- 2001.12. 6 IT분야의 규제개혁의 방향성 (IT관련 규제개혁전문조사회 보고)
- 2002. 6.18 e-Japan중점계획 -2002
- 2003. 7. 2 「e-Japan전략II」
- 2003. 8. 8 e-Japan중점계획 -2003
- 2004. 2. 6 e-Japan전략II가속화 패키지
- 2004. 6.15 e-Japan중점계획 -2004
- 2004. 9.10 IT국제정책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 2004. 2. 7 정보 보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 기능의 재검토 계획
- 2005. 2.24 IT정책 패키지 -2005
- 2006. 1.19 「IT신개혁신략」
- 2006. 7.26 중점계획 -2006
- 2007. 4. 5 IT새개혁 전략정책 패키지
- 2007. 7.26 중점계획 -2007
- 2007.11. 7 IT에 의한 지역활성화 등 긴급프로그램 골자
- 2008. 2.19 IT에 의한 지역활성화 등 긴급프로그램
- 2008. 6.11 IT정책로드맵
- 2008. 8.20 중점계획-2008
- 2008. 9.12 온라인이용확대 행동계획
- 2009. 4. 9 디지털 신시대를 향한 새로운 전략
- 2009. 5.20 지상 디지털 방송에의 이행완료를 위해 긴급히 대처해야할 과제에의 대응책
- 2009. 7. 6 「i-Japan전략 2015」
- 2009. 9.16 (민주당 정권 탄생)
- 2010. 5.11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전략」
- 2010. 6.22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전략 공정표

2. 전자정부 법률체계

전자정부법

- 현재 포괄적인 전자정부 법안은 없음

IT기본법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IT기본법)(2000년 11월 29일)

- 목적
 -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대표적인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 형성에 관한 시책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
 - ※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 : 인터넷과 그 외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롭고 안전하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입수, 공유, 발신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이고 활력 있는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의미
- 기본관점
 - 경제구조개혁추진(전자상거래 촉진, 신규 사업 창출)
 -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국민생활 실현(저렴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
 - 개성이 풍부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실현(지역의 취직기회 창출, 다양한 교류기회 증대)
 - 민간주도를 원칙으로 하며, 정부가 공정한 경쟁 촉진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는 적절한 관민의 역할 분담
 - 정보통신기술 이용 기회 및 활용능력의 격차 시정(정보격차 대책)
 - 고용 등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 시책의 기본방침
 -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확충, 콘텐츠 충실, 정보 활용 능력 습득의 일체적 추진
 -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형성, 공정한 경쟁 촉진 및 기타 조치
 - 국민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 및 전문적 인재육성

- 규제개혁, 지적재산권의 적정한 보호, 이용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촉진
- 전자정부, 전자지자체 추진(행정의 간소화, 효율화, 투명성 향상), 공공 분야 정보화
- 네트워크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개인정보보호
- 창조적 연구개발 추진
- 국제적 협조 및 공헌(국제규격 정비, 대외 협력)

행정정보화 및 공공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관련 법령

행정수속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 151 호)

- 취지
 -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신청 등 행정수속(약 5,200 수속)에 대하여 서면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 정비
 - 행정 수속의 온라인화를 통해 국민의 편리성 향상 및 행정운영의 간소화, 효율화 도모
- 규정사항
 - ① 온라인화 가능규정
 -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수속에 대하여 각 수속의 근거법령에 있어서 서면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경우 서면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특례규정 정비(온라인화를 위한 각 개별법령 개정 불필요)
 - 행정기관이 전자적 기록을 통해 서류의 열람 및 작성,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 정비
 - ② 적용예외
 - 수속의 성질에 따라 온라인화가 어려운 것을 법령표에 열거하고, 예외적으로 온라인화 가능규정 적용을 제외(대면, 현물이 필요한 수속에 한함)
- 시행
 - 공포일(2002년 12월13일)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

행정수속에 있어서 정보통신 기술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 152 호)

- 취지
 - 행정수속 온라인화법 규정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은 부분, 예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71개의 개별 법령 개정을 묶어서 하나의 법률로 정리
- 정비사항
 - ① 항시 수속의 온라인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의 적용관계 정리
 - 세관특례법, 공업소유권특례법, 식품위생법 등
 - ② 수속료 납부 전자화
 -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도로운송차량법 등
 - ③ 온라인화에 따른 수속 간소화
 - 주민기본대장법 등(주민표 첨부 등을 생략하기 위해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이용사무를 추가)
 - ④ 세입/세출 전자화, 국세/지방세 전자납세
 - 회계법, 등록면허법 등

전자서명과 관련된 지방공공단체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 153 호)

- 취지
 - 신청 등 행정수속의 온라인화를 위해 제3자에 의한 정보변조 방지, 통신 상대 확인을 위한 고도의 개인인증서비스를 전국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도 쓴 비용으로 제공하는 제도 정비
- 규정사항
 - ① 희망자에 대한 전자인증서 발행
 - 희망자는 시정촌 창구에서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가 발행하는 전자서명서 제공을 받을 수 있음
 - ② 전자서명서 실효정보 제공
 -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서가 첨부된 신청, 신고 등을 받은 행정기관(서명 검증자)으로부터의 요청에 대해 도도부현 지사는 전자증명서가 실효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 ③ 개인정보 보호
 - 취급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엄중하고 적절하게 보호(인증업무 등으로 인해 얻은 개인정보의 타목적으로의 이용금지, 시큐리티 대책 시행 업무, 엄중한 수비의미, 이용자에게 자기 개인정보 개시, 정정 및 불만 처리 보장)

④ 지정인증기관

- 인증서발행, 실효정보 제공의 업무를 복수의 도도부현에서 공동처리하기 때문에 도도부현 지사는 대신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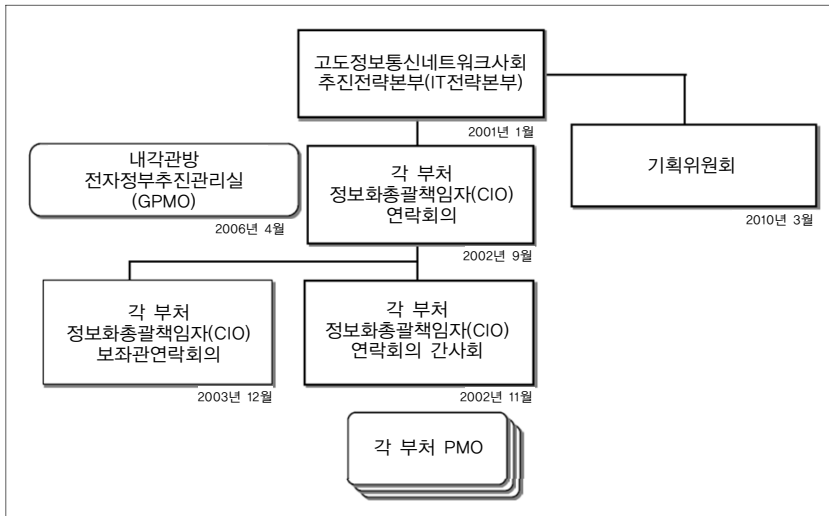
○ 시행

- 일부를 빼고 공표일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

3. 전자정부 주요기관

일본은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IT전략본부) 아래 내각관방 정보통신기술(IT)담당실 전자정부 추진관리실(GPMO), 총무성 행정관리국, 각 부처의 전체 관리조직(PMO) 등에서 전자정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림 2〉 일본 전자정부 추진체계



정책/전략 수립

내각부(内閣府),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추진전략본부(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 IT戦略本部)

- 정보통신기술(IT)의 활용으로 인한 급격하고 대폭적인 사회경제 구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고도 정보통신네트워크 사회 형성을 위한 시책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1년 1월 내각에 IT전략본부를 설치
 - IT전략본부의 수장은 내각총리대신(수상)이며, 내각부 과학기술정책특명대신이 IT 담당대신으로 IT전략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음
- IT전략본부는 ICT 관련한 다양한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

총무성(総務省)

- 총무성은 ICT 활용 촉진, 전기통신정책, 방송정책, 전파의 효과적 이용 등 ICT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u-Japan 등 ICT 분야의 정책 및 전략 수립
- 총무성은 행정조직, 공무원제도, 지방행정 재정, 선거, 소방방재, 정보통신, 우정사업, 통계 등 국가의 기본적 구조에 관련되는 여러 제도와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을 유지하는 기본적 시스템을 관할하고, 국민생활 기반에 널리 관계된 행정기능 수행
 - 중점적으로 정보통신의 고도화와 전자정부 추진

협력·조정

내각관방(内閣官房), 정보통신기술(IT) 담당실

- 내각관방은 내각의 보조기관으로서, 내각의 수장인 내각 총리대신을 직접 보좌·지원하는 기관으로 정보화 주관 담당부서로 정보통신기술(IT) 담당실이 있음
- 정보통신기술(IT) 담당실은 정부의 CIO 역할을 담당하며, IT 정책의 전략입안과 추진에 관한 사무처리와 통괄조정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IT전략본부의 사무국 역할 담당
 - IT 담당실 내에는 '전자정부 추진관리실'과 '생활 속의 전자정보 서비스 추진실'이 설치되어 있음
 - '전자정부추진관리실'은 정부부처의 공통 업무·시스템의 최적화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 이용 촉진 등 전자정부에 관계되는 제반시책의 추진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 담당
 - '생활 속의 전자정보 서비스 추진실'은 사회보장 카드(가칭)와 전자사서함(가칭)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검토하고, 사회 보장에 관련된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의 시책을 종합 조정

정책 이행

총무성(総務省)

- 총무성의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국, 정보유통행정국, 종합통신기반국, 정보통신 국제전략국, 행정평가국 및 정보통신 정책연구소에서 전자정부 관련 업무 수행

○ 정보화 주관 담당부서

- **행정관리국** : 행정의 감량화와 효율화를 추진하며 각 부처의 업무·시스템에 대한 최적화(효율화·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최적화 계획 책정
- **자치행정국** : 지방 공공단체의 원활한 행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분권의 추진, 지방자치제도의 기획·입안, 지방행정체제의 정비, 기초자치 단체의 행정재정기반의 강화
- **정보유통행정국** : ICT 이용의 고도화 추진과 방송의 디지털화, ICT 인재 육성과 정보보안 대책 등의 정책 추진
- **종합통신기반국** : 네트워크의 IP화, 광대역화, 모바일화에 따른 급속한 구조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심·안전한 이용환경을 정비하고 정보격차 해소
- **정보통신 국제전략국** : ICT를 국제경쟁의 성장력·경쟁력의 원천으로 보고, 글로벌한 관점에서 ICT 분야에 있어서의 종합적·전략적인 정책 전개
- **행정평가국** : 정부 정책의 리뷰 기능으로서 정책평가의 추진, 행정평가의 조사, 행정상담, 독립행정법인 평가를 수행. 각 부처가 필요성·유효성·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정책평가제도’를 관할하며, 각 부처가 실시해야 할 정책평가의 틀을 만들고, 각 부처의 정책평가에 대해 평가방식과 내용을 점검, 정보공표의 가이드라인 책정
- **정보통신 정책연구소(총무성의 외국)** : 정보통신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연수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정책연구 기관(2003년 4월 발족)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 경제산업성의 상무정보정책국의 정보정책 유닛에 소속된 과(정보정책과와 정보프로젝트실, 정보경제과와 정보보안정책실, 정보처리진흥과, 정보통신기과)와 문화정보관련 산업과(미디어·콘텐츠과)에서 정보화 관련 정책을 수행
- 정보프로젝트실에서 전자정부의 추진과 정보화 모델 프로젝트 표준책적 사업, IC카드·IC칩) 수행

기타 각 부처

- 각 분야별 세부 사업 및 계획 추진

자문 및 지원

독립행정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총무성 소관의 독립행정법인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연구개발과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사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

기타 단체

- 재단법인 지방자치제정보센터(LASDEC : Local Authorities Systems Development Center)
- 재단법인 일본정보경제사회추진협회(JIPDEC : Japan Information Processing Development Corporation)
- 재단법인 뉴미디어 개발 협회(NMDA : New Media Development Association)
- 재단법인 소프트웨어 정보 센터(SOFTIC : Software Information Center)
- 재단법인 디지털 콘텐츠 협회(DCAJ : Digital Content Association of Japan)
- 사단법인 임베디드시스템 기술협회(JASA : Japan Embedded Systems Technology Association)
- 일본CIO연락 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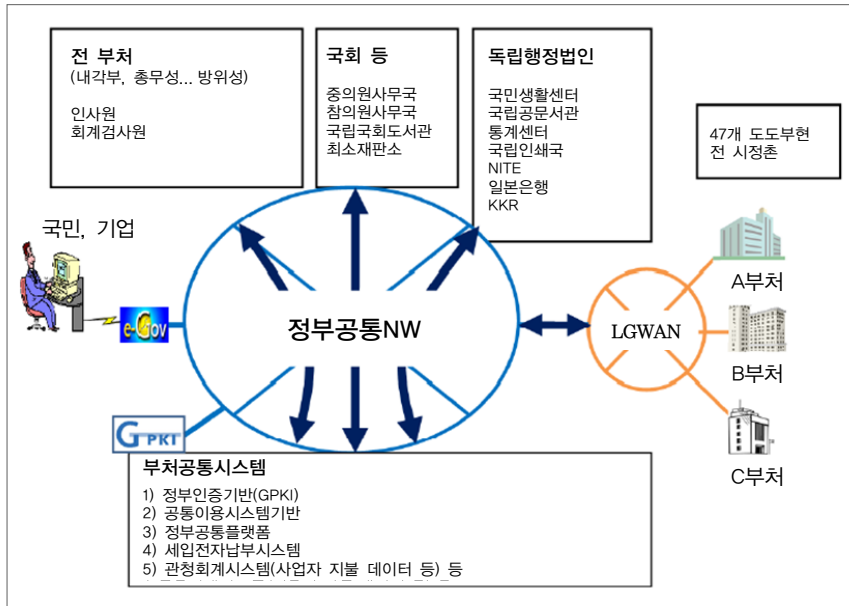
4. 전자정부 서비스

인프라

정부공통 네트워크

- 정부공통 네트워크는 각 부처 등의 LAN을 상호접속하는 정부 내 전용 네트워크이자 차세대 통신 프로토콜인 IPv6 등 정보통신기술의 진전 및 동영상 등을 포함한 대용량 정보유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
 - 정부정보시스템 통합 및 집약화 기반인 정부공통 PF 정비를 통해 각 정부부처 정보유통 증대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을 구축
 - 정부 기관 간 원활한 정보유통 및 공유를 위해 전 부처, 독립행정법인, 일본은행 및 국회, 정부공통시스템을 연결하는 통신회선으로 전자정부의 기반
 - 또한 지방공공단체 조직 내 네트워크를 상호연결하는 종합행정네트워크(LGWAN)을 통해 지방공공단체와도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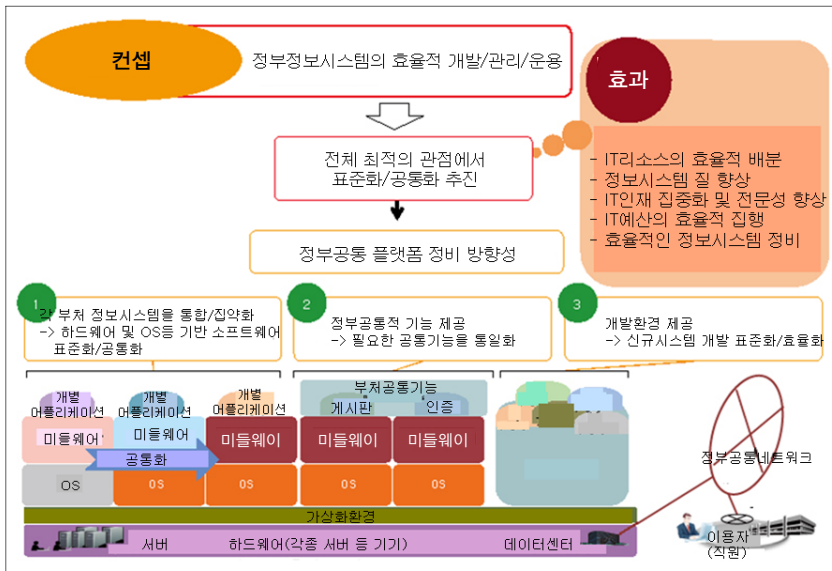
〈그림 3〉 정부공통 네트워크 구성도



정부공동플랫폼

- 정부공동플랫폼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현재 부처별로 정비/운영되고 있는 정부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집약화와 공통기능의 일괄 제공 등을 실행하는 기반
- 정부공동플랫폼 정비를 통해 정보시스템 부문의 운영/보수에 드는 부담을 절감하고, 정보시스템의 질적 향상 및 IT 비용 절감은 물론 정보시스템 부문이 부처 내 업무프로세스 개혁을 추진하는 핵심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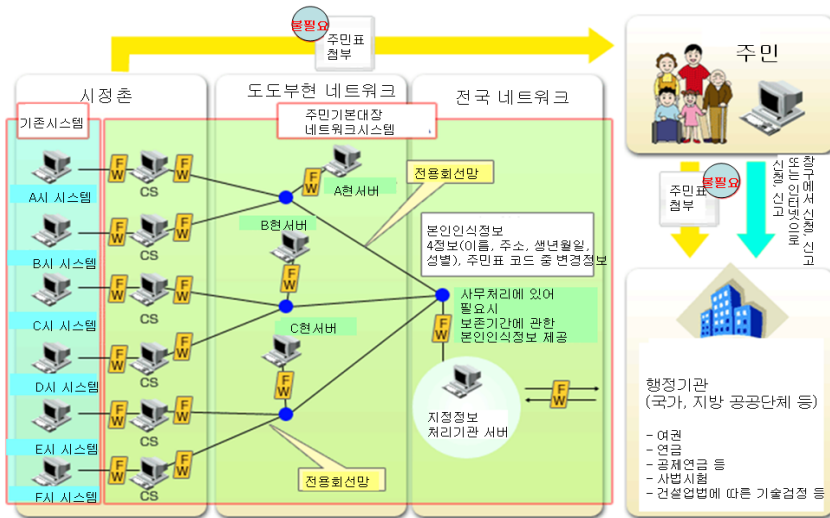
〈그림 4〉 정부공동 플랫폼 구성도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은 지방공공단체 시스템으로서 주민기본 대장 네트워크화를 통해 행정기관 등에서의 본인인증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며, 시청초촌을 넘어서는 사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 주민들의 편리성을 높이고, 지방공공단체의 행정 합리화를 가능하게 하며 전국공통의 본인인식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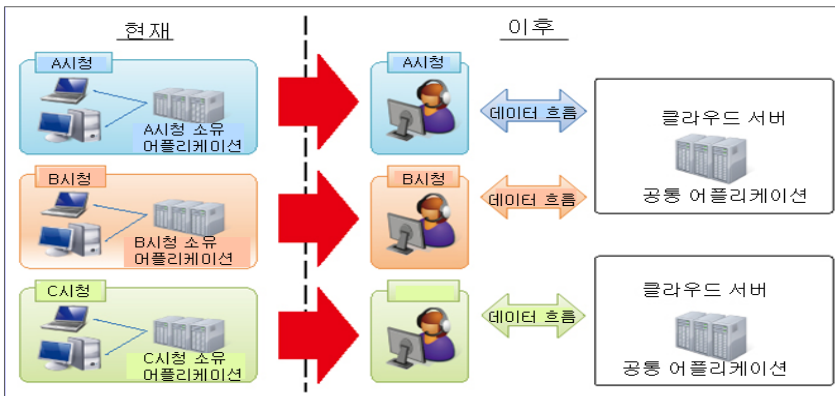
〈그림 5〉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도



지자체 클라우드

-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 업무에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행정비용을 대폭 감축하고, 업무 표준화를 통해 주민서비스 향상하고자 함
 - 이를 위해 2009년부터 종합행정 네트워크(LGWAN) 상에 구축한 커뮤니티 클라우드를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이용하는 형태로 지자체 클라우드 개발실증사업 추진
 - 또한 2010년 7월 총무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자체 클라우드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지자체 클라우드의 전국적인 전개를 도모

〈그림 6〉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이미지



국민서비스

전자정부 종합창구 e-Gov(www.e-gov.go.jp)

- 전자정부종합창구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민원서비스 신청 및 처리 보다는 정보검색이 중심
 - 출생, 결혼 등 라이프 이벤트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및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
 - 의견 개진 부문은 현재 행정기관이 정책의 입안을 위한 안을 공표하고 국민들의 의견이나 정보를 받는 장으로 현재 의견 개진 중인 다양한 정책 안건들이 올라가 있으며, 안전검색기능이 있음
- 전자정부 종합창구의 특징 중 하나는 기본 검색기능 외에 다양한 검색사이트를 자세히 나열하고 있는 점
 - 각 기관별 어린이를 위한 검색 사이트 모음, 휴대전화용 검색 모음 등이 특징적
 - 2011년 동일본 대재해 이후, 관련 정보검색이나 정보안내를 하는 서비스를 마련

〈표 2〉 e-Gov 세부 서비스 개요

구분	세부 분류
각종 검색, 정보제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검색 ○ 행정수속안내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수속 키워드 검색 - 라이프 이벤트별 수속안내 - 기업 및 사업자를 위한 수속안내 등 ○ 퍼블릭 코멘트 ○ e-Gov 전자신청 시스템 ○ 부처 횡단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문서파일관리부, 개인정보파일, 조직/제도 개요
부처 및 행정에 관한 정보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행정정보 안내 ○ 정보공개(독립행정법인 등) ○ 카테고리별 행정정보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처별 예산집행 정보, 광고, 보도, 조직, 법령, 정책, 조달, 신청/수속
동일본 대지진 관련 링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 ○ 피난소, 안위 확인정보 ○ 피해자 지원요청에 관한 정보 ○ e-gov 재해 관계 모바일 사이트

- 전자정부 서비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전자정부 종합창구 서비스를 심플하게 재구성한 간이판 서비스도 제공
- 전자정부 서비스 중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정부 간이판 사이트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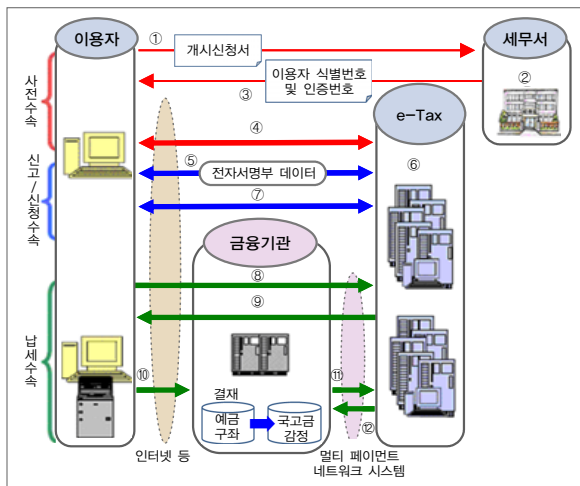
〈주요 구성〉

- 행정기관 등 홈페이지 검색
- 행정수속 안내 검색
- 법령검색
- 전자신청
- 퍼블릭 커멘트
- 정보공개/공문서관리/개인정보보호
- 정부 공보 온라인
- 어린이 서비스
- 행정기관 동영상 사이트

국세전자신고/납세 시스템(e-Tax)(www.e-tax.nta.go.jp)

- 개인, 법인, 전자납세, 지원정보 등의 검색이 가능
 - 개인의 경우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를 통해 화면의 안내에 따라서 금액 등을 입력한 후, 전자 신고용 데이터를 작성하여 전자신고(e-Tax)를 실시할 수 있음
 -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 이용 시 시판의 재무 회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 외에 본 사이트의 e-Tax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
 - 전자납세에서는 국세 납부 수속을 자택이나 오피스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 기존처럼 금융기관의 창구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소나 시간 등의 제약이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음

〈그림 7〉 e-tax 시스템 흐름도



기업서비스

기업 관련 행정수속 및 신청 전자서비스(www.e-gov.go.jp)

- e-Gov 종합창구에서 개업, 세금, 고용/복지후생, 무역, 자격, 조사통계, 은퇴 등 기업 및 사업자를 위한 수속 안내서비스 제공

〈세부 행정안내 항목〉

- | | | |
|-------------------|-----------|----------|
| · 회사 설립 및 회사관계 변경 | · 등기/공탁 | · 임원 변경 |
| · 종업원 | · 결산 | · 세금 |
| · 고용/복지후생/사회복지 | · 공제제도/조합 | · 무역/수출입 |
| · 지적재산권 | · 국가자격 | · 설비/기기 |
| · 사업계획/보고 | · 중소기업지원 | · 민간수속 |
| · 공안위원회 | · 조사통계 | · 활동종료 |
| · 각 서비스분야 고유수속 | | |

관공서 전자 입찰/신청(www.i-ppi.jp)

- 중앙정부나 지방 자치체への 입찰은 e-Japan 구상에 따라 전자입찰이 기본이 되고 있음
- 입찰정보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전국 각지의 공공입찰 정보 등의 검색이 가능

홍콩

Hong K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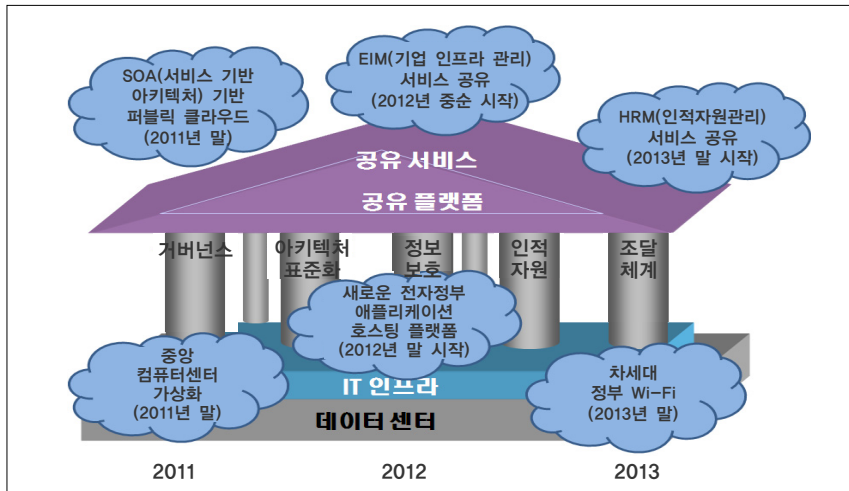
1. 전자정부 전략	73
2. 전자정부 법률체계	81
3. 전자정부 주요기관	84
4. 전자정부 서비스	88
• 인프라	88
• 국민서비스	91
• 기업서비스	92

1. 전자정부 전략

정부 클라우드 전략(Government Cloud Strategy)

- ‘2008년 Digital 21’ 전략에 따라, 차세대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전략 발표(2011.3.25.)
 - 핵심 IT 인프라 및 서비스를 향후 5년 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전환
 - 홍콩의 무역·경제 허브화 비전을 바탕으로 하이엔드 데이터센터 유치 추진
 - 정부의 IT 기능 및 서비스의 민첩성 향상, 업무 효율성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비용과 탄소배출, 환경부하의 절감효과 기대

〈그림 1〉 홍콩 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전략



‘Digital 21(數碼 21)’

- 홍콩의 정보화 노력은 1997년 등젠화(董建華) 행정장관의 시정연설에서부터 시작(1997.10)
 - 이 연설에서 등장관은 과학기술 육성 및 정보화 확산을 위해 홍콩을 미래 정보사회의 선도자로 도약하는 비전을 제시
- 이러한 정책적 기초 하에 IT를 활용한 홍콩의 경제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Digital 21(數碼 21)’ 전략을 수립

- 급변하는 대내외 정책적·기술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현재까지 총 4차례 전략 수립(1998, 2001, 2004, 2008)

2008년 Digital 21(2008年 數碼 21, 2007.12)

- 국제적 디지털 도시(World Digital City)로서의 홍콩
 - 홍콩 정부는 홍콩을 세계적인 디지털 도시로 만들기 위해 1998년부터 'Digital 21' 전략을 발표
 -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양질의 인터넷 및 이동통신 서비스 향유가 가능하며, 이는 홍콩의 디지털 도시화의 기본 인프라가 되고 있음
 - 홍콩 정부는 이러한 인프라에 글로벌 IT 기업 유치를 위해, 사이버 포트 및 Science Park 건립을 통해, 국제적 디지털 도시를 구현
- '2008년 Digital 21'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성과
 - 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로 2007~2008년 예산 중 54억 달러를 공공 서비스 효율과 품질 개선에 투자
 - 무선도시(Wireless City) 건설
 - 2007년 20억 달러를 투자해, 정부 부처와 공공장소(공항, 공원 등) 등 약 350개 지역에 Wi-Fi 설비 구축 계획을 발표
 - 인터넷 서비스사인 PCCW의 주도로 진행되어, 2009년 기준 350개 정부 부처와 공공 장소(공항, 공원 등)에 Wi-Fi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하루 1,500명이 Wi-F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국제적 IT 단지 구축
 - 사이버 포트는 2001년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T 허브 및 최고의 디지털 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건립
 - 2003년에는 R&D 중점 IT 단지인 Science Park를 설립하여 Philips, MS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입주
 - 또한 광둥성(廣東省), 심천(深川), 광주(廣州) IT 기업과 활발한 교류 전개
 - 중국과의 IT 협력
 - 홍콩이 최초로 중국 본토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12.5계획, 2011~2015)에 포함됨에 따라, 홍콩을 중국 경제의 한 부분임을 강조하는 계기로 작용
 - 2007년 체결한 IT 협력안에 의해, 홍콩-중국 간의 IT 분야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 신기술에 투자하는 홍콩 중소기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중국과의 경제협력강화협정(CEPA)
 - 홍콩-중국 간 경제협력강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통해, 전자제품을 포함한 모든 홍콩 원산지 제품을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 가능

- IT 관련 통상정책
 - 수출입 관리 및 관세제도
 - 전략물자, 의약품, 독극물 등 소수의 제한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거래가 자유롭고, 담배, 주류, 메틸알코올, 하이드론 카본오일을 제외한 일반 상품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무관세 정책을 적용
 - 자유무역항으로서 IT 상품을 포함한 일반 수출입 상품에 대해 수입쿼터 제도와 무관세 적용

〈표 1〉 ‘2008년 Digital 21’의 중점 추진 영역 및 세부 계획

중점 추진 영역	주요 내용	세부 실행 계획
디지털 경제 추진	- IT 기술이 점차 실물 거래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더욱 장려하고, 특히, 홍콩-중국 간 거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사무관리국 설립에 대한 입법 초안 마련 - IT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 서비스 통합 추진을 통한 전자정부 프로그램 강화 - 기술협력 촉진 - 포괄적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 각 부문의 의견 조율 주도
첨단 기술 개발 및 혁신 촉진	- 홍콩 정부는 IT 분야에 전년 대비 51%가 넘는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며, 각종 신규 IT 관련 프로젝트와 전자정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포트의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쇼케이스 전시 - Science Park 제2단계 계획 완료 (2007~2010년) - 2012년까지 디지털 지상파 방송으로의 전환 - 무선 브로드밴드 주파수 개방(2008년) - 정부 내부 인트라넷의 IPv6로의 전환 추진(2008년) - 첨단 과학기술 허브로서의 사이버 포트와 Science Park의 입지 강화 - R&D 센터를 통한, 응용 연구개발, 기술이전, 신기술 개발 및 상품화 - 홍콩의 첨단기술 테스트베드로서의 입지 강화 - 통신·방송 융합 촉진 - 홍콩의 IT 성과에 대한 국제적 홍보
기술협력 및 무역 허브로서의 홍콩 입지 강화	- 홍콩의 R&D 센터 개방 및 개발된 기술을 중국은 물론 전 세계와 거래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 선정 및 관련 정책 연구 완료(2007년 말~2008년) - 역량기준 개발을 통한 IT 산업 촉진 - 홍콩우정(HKP)에서 발행하는 전자 인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규 방안 마련(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solicited Electronic Messages Ordinance' 조례 시행 - 기술 및 혁신을 위한 홍콩-중국 본토 간의 협력 - 기술협력 및 무역 허브로서의 홍콩의 입지 강화 - '홍콩-심천 혁신서클' 전략에 따른 심천과의 협력 강화 - 인터넷 관련 사고 처리를 위한 지역 협력 강화 및 시민들을 위한 재난 관리·대응 계획 마련 - e-비즈니스 및 디지털 콘텐츠 전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브로드밴드 구축 - IIPF(ICT Industry Partnership Forum)와의 정기적인 논의를 통한 IT 산업 발전 방향 모색 - 민간 부문 참여 유도를 위한 카달로그 발행(연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와 지속적인 협력 -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위한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문화 양성 - 데이터 표준화 개발을 위한 타 부문 간 협의 촉진
차세대 공공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8월 GovHK(香港政府一站通) 정식 개통 - 이 사이트를 통해 1,200개의 전자 민원서비스를 통합 - 향후 관련된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vHK에 민간 부문 콘텐츠 및 서비스 소개(2007~2008년) - GovHK의 지리공간 정보서비스 플랫폼 개발(2009년) - 전자정보관리(EIM) 전략 발표(2009년) - 서비스채널관리전략 제정(2008년) -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신분관리 프레임워크 제정 및 발표(2008년) - 정부 부처들의 전자조달 프로젝트 시범 가동(2008~2009년) - 의원관리국 및 민간의료기관, 의사와 공동으로 전자의료기록(EHR) 시범 계획 검토(2007~2008년) - 교통정보시스템(TIS) 구축(2008년) - GovHK 콘텐츠 및 서비스 확대를 통한 공공 서비스 개혁 추진 - 위생부는 전자의료기록 도입에 관한 건의를 공식화할 것

포괄적 지식기반 사회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상용화를 통한 '무선도시' 건설 - 학생의 IT 편의시설 이용 기능화 - 기업 관련 저렴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정부기관에 무선네트워크 핫스팟 설치(2007년) - 제3차 IT 교육전략 발표(2008년 1월) -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 실행 계획 제정 등(2008년) - 정부, 산업계, 지역사회에서 지식 창조 및 공유 문화 육성
----------------------	--	--

2004년 Digital 21(2004年 數碼 21, 2004.4)

- 홍콩 정부는 IT 발전과 개발을 위한 8개 영역의 로드맵을 담고 있는 '2004년 Digital 21' 전략 발표
 - 이 전략은 지난 'Digital 21' 전략을 통해 축적한 정보화 추진력을 유지하면서, 비즈니스, 커뮤니티, 세계 속의 홍콩 위상 제고를 위해, IT 이점의 지속적인 발굴을 도전 과제로 삼고 있음

〈표 2〉 '2004년 Digital 21'의 주요 내용

중점 추진 영역	주요 내용
정부 리더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의 국제적 이미지를 역동적인 디지털 도시로 홍보하는 정부 역할 강화 - 정부 IT 프로그램의 아웃소싱 확대 - 혁신적 기술 애플리케이션 개발 촉진 - 전자정부 프로그램을 통한 e-비즈니스 발전 촉진 -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및 방송부문 개발 촉진
지속적인 전자정부 프로그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 프로그램 목표를 서비스 질과 효과에 초점 - 전자정부서비스의 가치창출과 활용성 확대 - 고객 참여 확대 -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IT 이용 활성화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디지털 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규제 기틀 확립 - 광대역 인프라 및 이동통신 보급 확대 - 사이버포트 및 Science Park의 지속적 추진 - 기업의 e-비즈니스 도입 촉진 -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 추진조직의 통합화 및 정보인프라전략위원회(IIAC)의 역할 재정립 - 방송 및 통신 부문 규제기관의 통합 검토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기술,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술에 대한 R&D 지원 강화 - 3G 모바일 네트워크, 디지털 방송, 통신·방송·인터넷 컨버전스 등 신기술 도입 촉진 - 신기술 채택 및 표준화에 있어서 국제적 선도

IT 산업 활성화	- IT 산업의 중국 본토 시장 진출 촉진 - 역동적·경쟁력·혁신적 IT 산업 육성
지식경제 시대의 인적 자원 개발	- 현재의 인적자원 및 지식경제 교육 훈련 촉진
정보격차 해소	-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IT 홍콩' 캠페인의 지속적인 추진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2001년 Digital 21(2001年 數碼 21, 2001.5)

- 'Digital Hong Kong, Connecting Global'라는 목표 하에 선도적인 e-비즈니스 및 디지털 도시 구축을 위한 IT 인프라 강화 및 서비스 향상
 - 2001년 전략은 1998년에 수립된 'Digital 21'을 국내외 정책적 환경 변화 및 기술진보에 따라, 재검토 및 수정·보완
 - 2001년 버전에는 핵심결과영역(KRA, Key Result Areas) 개념을 도입, 총 5개 영역의 KRA를 선정하고, 각 항목별 실행계획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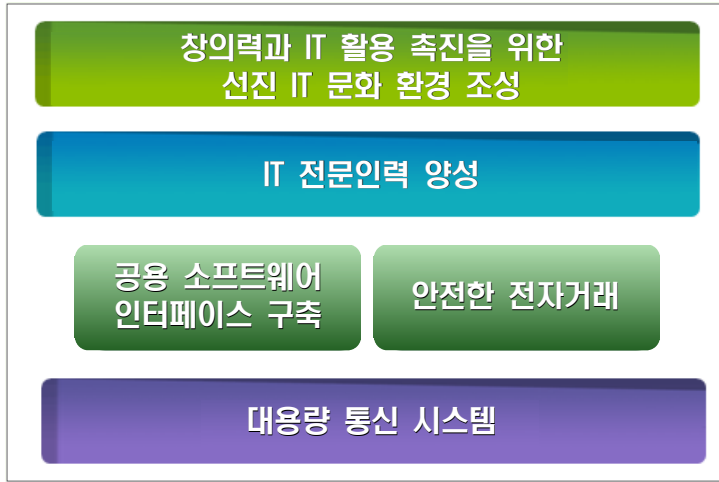
〈표 3〉 '2001년 Digital 21'의 주요 내용

중점 추진 영역	주요 내용
국제적 수준의 e-비즈니스 환경 조성	- 'Digital 21' 전략에 대한 국제적 홍보 - e-비즈니스 인프라 개발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홍보 촉진 - 사이버 포트 운용을 통한 새로운 정보인프라 구축 - 개방적·경쟁적 IT 환경 조성 및 촉진 - 방송 허브로서의 홍콩의 입지 강화 - 중국의 WTO 가입에 대비한 홍콩의 입지 전략 수립
홍콩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 포괄적인 전자정부 정책 발표 - ESD(Electronic Service Delivery)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 - 정부전자조달시스템 도입 - 정부 IT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아웃소싱
홍콩의 정보경제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 시장 수요에 대한 I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TF 조직 -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IT 전문인력 공급 확대 - 외부 IT 인적자원의 충분한 활용 - 디지털 경제에 대비한 인력 양성
사회전반의 디지털 역량 강화	- 사회 전반에 걸친 IT 인식 제고 - IT 역량 강화 -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선도기술 개발을 위한 홍콩의 IT 역량강화	- 차세대 무선기술 개발 - 스마트 ID 카드 기술 도입 - 디지털 지상파 TV의 전개 및 발전 - 차세대 인터넷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1998년 Digital 21(數碼 21 新紀元, 1998.11)

- 홍콩의 정보인프라 구축 및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대용량 통신시스템 및 공용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구축, IT 전문인력 양성, 선진 IT 문화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의 정보화 정책 제시
- ※ 이 전략과 관련된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개설(www.digital21.gov.hk)

〈그림 2〉 1998년 Digital 21 전략 프레임



〈표 4〉 ‘1998년 Digital 21’의 주요 내용

중점 추진 영역	세부 영역	주요 내용
대용량 통신 시스템 구축	통신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을 투자 적격지로 부상시키고, 경쟁력 및 혁신 제고를 통한 아시아 최고의 통신센터 지위 선점 - 통신시장 개방 및 해외 통신장비시장 자유화
	ESD(Electronic Service Delivery)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연중무휴 전자적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한 공통 정보 인프라 구축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2중 언어(중국어, 영어) 공용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터넷 허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특구 내 인터넷 트래픽 중계역할을 해 왔던 홍콩대학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점으로 확대
안전한 전자 거래를 위한 공용	중국어 인터페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어 사용자를 위한 중국어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전자 공공 서비스 제공에 활용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구축	PKI(공개키기반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PKI 구축 - 인증서 발급 기관 설립 및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위한 법제도 마련
IT 전문인력 배양	교육과정에 IT 활용	- 교육과정에 IT 활용 : 정규 교육과정에 IT 도입을 위한 전략 수립 및 비제도권 교육기관과 연계한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등)
	IT 전문인력 공급	- IT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전문인력 공급계획 및 장기적인 교육 계획 수립
선진 IT 문화 환경 조성	정부의 IT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부처의 네트워크를 인터넷에 연계하고, ESD를 통하여 공공 서비스 제공 - 정부 행정의 효율화 제고를 위해 정부의 사무자동화(OA)
	TV 시장	- TV 시장 혁신 및 서비스 제공, 첨단 방송 거점 환경 조성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콘텐츠 거점지	- 혁신적 인터넷 사이트 개발 촉진
	중국어 애플리케이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어 컴퓨팅 표준 개발 및 애플리케이션 상용화 - 중국 본토 IT 자료의 DB화 - 중국 본토의 주요 기관과의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IT 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홍콩생산성위원회, 홍콩산업기술센터, Science Park 건설 프로젝트 등을 통한 기술 개발 및 자문 서비스 제공 - 지방 IT 산업 육성 촉진을 위한 IT 프로젝트 아웃소싱
	IT 산업 투자	- 자금 지원 등을 통한 IT 산업 투자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자금 지원 프로젝트 실시
	IT 활용 우수 사례 발굴	- 민간 부문 IT 활용 촉진을 위해, 우수사례 발굴, 우수기업 시상 등
	IT 및 서비스 홍보	- 홍콩의 IT 및 서비스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한 홍보 강화
	사회 각계에서의 IT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활용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 협회 등 관련 기관과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들의 e-비즈니스 촉진

2. 전자정부 법률체계

전자정부법

- 현재까지 전자정부에 관한 단독 법은 없음

관련 법령

전자거래조례(電子交易條例, Electronic Transactions Ordinance, 2000.1 제정, 2004.6 개정)

- 홍콩 내의 상업적·기타 용도로 e-비즈니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정
 - 홍콩에서의 e-비즈니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고, 전자 형태의 계약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실성 및 보안성 제고에 목적을 둠
 - e-비즈니스의 신뢰성 제고 및 보안 확립을 위한 인증기관(CA)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법규 제정
- 주요 내용
 - 전자적 기록 및 전자서명
 - 법률에 의해, 정보를 수기에 의하여 제공 및 표현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전자적 기록 사용을 허용
 - 법률에 의해, 정보를 수기에 의하여 저장하도록 규정하거나 원본 형태로 표현 및 저장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전자적 기록의 형태로 정보를 저장 및 표현하는 것을 허용
 - 법률에 의해, 개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자서명을 허용
 - 정보가 전자적 기록의 형태로 사용되어 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
 - 전자적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에서 전자적 기록의 증거로서 채택이 거부되지 않음
 - 유언, 신탁, 선언 진술서, 대리위임권, 법원의 명령, 영장, 환어음, 부동산 및 동산의 거래에 관계된 문서 및 증서 등 특정 항목은 이 법안의 관련 조항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됨
 - 인증기관
 - 홍콩우정(HKP, HongKong Post) 이외에도 민간 부문의 인증기관 설립은 자유로우며, 인증기관의 수는 시장에 의해 결정되나, 소비자 이익 보호

- 및 사용자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자발적 공인제도를 도입·운영함
- DITS(Director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가 법안에 의거해, 인증 기관을 공인하는 권한을 가지게 됨

개인정보보호법(个人资料(私隱)条例,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 1995 제정, 2011.11 개정)

- 6년 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률개혁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95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 제정
 - 이 법에 근거하여 통합된 집행기구로서 ‘개인정보커미셔너(PCPD,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for Personal Data)’ 설립
- 주요 내용
 - OECD의 개인정보처리원칙에 따라, 6개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채택
 - 개인정보처리기관은 이 법에서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반하는 행위나 업무 수행을 금지
 - 개인정보보호 원칙은 수집, 정확성, 이용, 보안, 고지, 정보주체의 참여에 관한 규율임
 - 전자기록뿐만 아니라, 수기기록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킴
 - 단, 이 법은 홍콩에 있는 중국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모델로 하여 개인정보 커미셔너에 강력한 집행권한 부여
 - 개인정보커미셔너 수장은 피해구제(조정), 지침 제정 및 고시, 프라이버시 규약 승인, 조사감독 및 행정 규제 등을 담당
 - 개인정보커미셔너는 위원장, 내무장관이 임명하는 4-8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기구로서 ‘개인정보자문위원회’를 설립
 - 또한 기술 발전에 관한 컨설팅을 위해 ‘기술발전상설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두고 있음

전신조례(電訊條例, Telecommunications Ordinance, 1963.1 제정, 2009 개정)

- 영국법에 영향을 받아 부문별 규제(Sector-Specific) 정책을 시행
 - 통신 부문은 ‘통신조례’에서, 방송부문은 ‘방송조례’에서 각각 규제
 - 통신서비스를 규정, 국제전기통신 및 역내의 텔렉스, 전보서비스, 네트워크 관리 및 사업자 면허 담당

조달 관련 규정

- 홍콩의 정부조달제도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거해 실시
 - 국내 및 해외 공급자와 용역제공자와의 공개적이고 공평한 경쟁 유지
 - 2003년 7월 1일 금융서비스 및 재무관리국(財政事務及庫務局) 산하에 설립된 정부물류공급처(政府物料供應處)에서 담당
 - 전신(前身은) 1938년 설립된 物料供應處이며, 차량관리처와 정부인무처(印務處를) 합병
 - 정부부서 및 비정부 공적부서의 물품조달과 보관, 보급업무를 수행하며 하자 발생 시 클레임 업무도 담당
- 정부 조달원칙
 - 공적책임(Public Accountability), 적가(Value for Money), 투명성(Transparency), 공개적·공평한 경쟁(Open and Fair Competition)
- 주요 법률
 -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106조 및 110조
 - 재정의 독립 유지 및 화폐금융제도 법정주의
 - 공공자금법
 - 공공자금의 운영과 조달
 - 비축 및 정부조달 법령(Stores and Procurement Regulations)
 - 정부의 조달절차 규정

3. 전자정부 주요기관

정책·전략 수립 및 이행

OGCIO(Office of the Government Chief Information Officer, 2004.7)

- 상무경제발전국(商務及經濟發展局) 산하에 설립된 OGCIO는 대내외 IT 사업 전반에 걸친 정책 및 규제 등을 수립 및 이행
 - IT 기술 서비스 제공 및 지원, 'Digital 21' 전략 하에 IT 관련 기술 정책, 전략, 계획 및 조치 등을 제정하며, 정부의 IT 관련 부문 투자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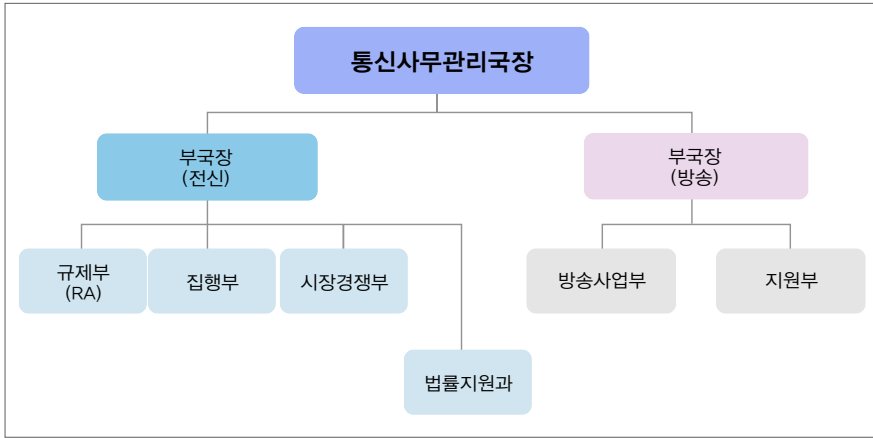
〈그림 3〉 OGCIO 조직도



통신사무관리국(OFCA, Office of the Communications Authority)

- 2012년 4월 1일로 방송통신 규제의 효율성 향상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기존의 OFTA(전신관리국)를 새로운 방송통신 통합 규제기구인 통신사무관리국(OFCA)으로 개편
- 통신 서비스에 대한 기술 및 경제 규제, 통신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유지 및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 관리
- 홍콩 내 인증기관(LCB, Local Certification Body) 4곳과 캐나다에 외국 인증기관(FCB, Foreign Certification Body) 1곳을 두고 있음

〈그림 4〉 통신사무관리국(OFCA) 조직도



혁신기술위원회(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

- 1998년 3월 최초 설립되어, 현재 상무경제발전국(商務及經濟發展局)에 소속
- 홍콩의 첨단기술 연구부서로서, IT,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 연구 및 개발 지원

지원

Digital 21 전략자문위원회(D21SAC, Digital 21 Strategy Advisory Committee)

-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 고위직 지원을 얻기 위해, 2004년 10월 설립된 정보인프라전략위원회(IIAC, Information Infrastructure Advisory Committee)를 'Digital 21 전략자문위원회(D21SAC)'로 개칭

- 상무경제발전국장을 위원장으로, 혁신기술위원회, OGCIO 등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
- 산하에 ‘디지털 인클루전 TF(Task Force on Digital Inclusion)’, ‘전자정부서비스 TF(Task Force on E-government Service Delivery)’, ‘산업촉진 TF(Task Force on Industry Facilitation)’를 설립하고,
 - ‘Digital 21’ 전략의 비전, 목표 수립 지원 및 전략 이행 촉진, 추가 조치사항 및 프로그램 추진상황 평가 등을 통한 홍콩의 IT 기술 개발에 대한 청사진 제시

중문인터페이스자문위원회(CLIAC, Chinese Language Interface Advisory Committee)

- 국제표준화기구에 중문 컴퓨터시스템 및 관련 항목 제공
- 홍콩의 ISO10646 표준 채택 추진
 - ※ ISO 10646 :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다국어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한 국제 표준 코드인 ISO 10646을 개발
- 유니코드 HKSCS(The Hong Kong Supplementary Character Set) 관리 등

인증기관운영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Code of Practice for Recognised Certification Authorities)

- ‘전자거래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증기관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제공
- CA에 대한 원칙 검토, 기술적 표준 및 절차에 대한 검토
- 홍콩 내 인증기관의 자발적 인가제도 운영에 관한 관련 사업 지원 등

기타

- 연구기관

기관명	주요 업무
ASTRI(홍콩통신연구소)	- 통신연구소 - 통신기술, 기업 및 소비자 전자제품, 다기능 시스템 기술 연구
ETI(e-비즈니스연구소)	- e-비즈니스 연구소 - e-비즈니스 관련 기술 개발, 특허, 기술 이전, 연구개발 등
Hong Kong Science & Technology Parks	- 통신연구소 - 홍콩의 Science Park, 산업단지, 기술 지원, 연구 서비스 제공

IT Matters for Hong Kong	- 정보통신 기술연구소 - HKSC, HKIF, WTIA, ISIA 협회 지원, 홍콩 IT 미션 연구 등
The Hong Kong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 정보기술 산업협회 - IT 기업 유치, 홍콩 및 해외 업계 동향, 발전방향 모색, IT 관련 사업 계획, IT 협업 촉진,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등
AEI(Asia Economic Institute)	- 아시아 경제연구소 -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어세아니아, 북아시아 경제 연구
GSI Hong Kong	- 홍콩의 대표적인 비영리 비즈니스 커뮤니티 - 글로벌 표준 설정, 홍보, 사업 지원, 컨설팅, e-비즈니스 등

○ 협회

기관명	주요 업무
Communications Associations of Hong Kong	- 통신협회 - ATIE 포럼, 국제 관계, 홍콩의 정보통신 관련 출판물 간행
CASBAA (Cabel and Staelite Broadcasting Assosiation of Asia)	- 아시아 케이블 및 위성 방송 협회 - 간행물, 관련 자료, 규제 및 법률 정보 제공
Hong Kong Semiconductor Industry Council	- 반도체 산업 협회 - 반도체 업계의 법률, 업계 동향정보, 시장정보, 홍보, 교육 및 인력 개발 등
Hong Kong Computer Society	- 컴퓨터 학회 - 산업 동향, 컨퍼런스 정보 제공 등
Hong Kong Electronic Industrial Association	- 전자산업 협회 - 간행물 발간, 업계 동향 정보 제공 등
Hong Kong Information Technology Federation	- 정보기술 연맹 - IT 관련 사업의 이익을 위한 포럼 구성, 연구 등
Hong Kong Internet Providers Association	-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협회
Asian Development Bank	- 아시아 개발은행 - ADB 프로젝트, 간행물 발간, 경제학 및 관련 통계 정보 제공
HKPC(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	- 홍콩생산성위원회 - 산업지원, 산업 관련 설문조사 진행, 투자 프로젝트 등

4. 전자정부 서비스

인프라

포털

홍콩정부포털, GovHK(www.gov.hk)

- 2008년 ESD Life에서 GovHK로 서비스 전환
- 영어 및 중국어 2개 언어로 동일한 구조와 내용의 웹 인터페이스 제공
- 사용자에 따라, 홍콩거주자, 비즈니스 및 무역, 비거주자, 청소년그룹으로 구분하여, 개인화된 맞춤형 플랫폼서비스(MyGovHK, 2010) 제공
 - 출입국관리, 문화·여가 활동, 의료보건 서비스, 교육훈련, 환경, 세무, 취업, 부동산, 교통, 통신, 법률정보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Tell me@1823)

- 민원 접수 위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2011.4)
 - 시민 민원 접수를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Tell me@1823” (www.gov.hk/sc/about/govdirectory/mobilesites.htm#Tellme1823)을 출시
 - 1823콜센터와 정부정보기술오피스(OGCIO)가 공동 개발
 - 영상, 음성, 문자의 형태로 1823콜센터에 각종 제보나 민원 접수 가능
 - GPS 위치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민원이 제기된 지점을 보다 정확하게 전송 가능

네트워크

무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GovWiFi)

- ‘2008년 Digital 21’ 전략의 홍콩의 무선인터넷 도시화 계획에 따라, ‘GovWiFi’ 프로그램 실시
 - 홍콩 내 유명 관광지나 공공 장소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Wi-Fi 서비스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홍콩 시민, 관광객, 비즈니스 업무 방문객 등 다양한 사람들이 무선 인터넷 이용 가능
 - 2012년 3월까지 약 400여개의 무료 접속 AP 설치

법정부 서비스(G2G)

온라인 공무원 교육 시스템(www.csb.gov.hk)

- 공무원사무국(Secretary of the Civil Service) 소속 공무원 교육 훈련기구(Civil Service Training and Development Institute)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및 인력 개발, 언어교육, 정책 입안 담당자 교육 등을 담당
 - 주요 강좌는 영국(언어), 미국(IT 분야), 캐나다(공공정책) 등 각국에서 수입한 교재를 활용
 - 고위공직자 채널을 별도로 마련하여 리더십 과정, 공공정책 개발, 상황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코스 마련
 - 특히 중국학자나 고위관료를 초빙하여 중국에 대한 교육 및 방문 교류
 - 각종 교육 프로그램은 자체 개발, 연구용역기관 의뢰, 공동 개발에 의해 제작하고 있으며, 소규모 그룹교육 및 위탁교육도 실시

전자정부 사회관리 시스템

- 홍콩경찰청(HKPF, www.digitaltv.gov.hk)의 CCIII(Command and Control Communication System) 구축(2010.5)
 - 통합망을 통한 지휘체계 일원화 추진
 - 타 국가의 경우, 정부 주도로 국가통합망(GRN, Government Radio Network)을 구축해 정부기관에 확장시킨 반면, 홍콩은 경찰청에서 선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 및 다른 기관으로 확장
 - CCIII 시스템으로 교체된 이후, 비용 절감 및 정확한 정보 제공 가능

전자신원/전자인증

다목적 스마트 ID카드(Multi Smart ID Card)

- 홍콩 정부는 2003년 6월부터 11세 이상 모든 홍콩 시민에게 기존의 종이로 된 신분증을 스마트 ID카드로 대체하는 작업 추진
 - ※ 2003. 8월~2007년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스마트카드 전환 계획 추진
 - 2003~2007년까지 680만 명의 홍콩시민에게 스마트 ID카드 발급
 - 스마트 ID카드에는 디지털 지문과 소유자의 이름, 사진, 생년월일, 성별,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 기록
 - 지난 2000년에 개시한 전자인증 서비스인 'e-Cert'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 전자정부 서비스와 e-비즈니스 이용 시 사용자의 신분인증기능도 제공
- 입·출국심사 시 자동심사 가능
- 2005년 6월부터 도서관카드, 운전면허증, 전자인증서 기능을 제공하도록 프로그램화된 메모리칩 삽입

전자상거래 인증

-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인증제도 마련
- 홍콩에는 현재 총 3개의 인증기관이 존재

〈표 5〉 홍콩의 인증기관

인증기관	운영개시
HongKong Post (www.hongkongpost.com)	2000.1
Digi-Sign Certification Services Limited (www.dg-sign.com)	2001.7.26
HiTRUST.COM(HK) Incorporated Limited (HiTRUST.COM(HK) Incorporated Limited)	2002.4.29

- 홍콩우정(HongKong Post) 인증 서비스
- 홍콩에서 가장 먼저 인증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14만5000장의 인증서(e-Cert) 발급
- 홍콩우정은 홍콩-중국 간 상호연동 시 사용할 목적으로 두 종류(개인, 조직)의 Global e-Cert 개발
- 가입자 신원확인을 위한 대리기관이 임명될 예정이며, 홍콩우정과 광둥(Guangdong Electronic) 인증기관은 협약 체결
- 온라인 신용보고서(개인신용보고서에 대하여 온라인 접근을 가능토록 함), 이메일, 온라인 बैंकिंग, 온라인 쇼핑, 온라인 무역, 온라인 베팅, 온라인 문서 제출, 온라인 경매, 온라인 데이터 전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서 사용

국민서비스

인포섹(www.infosec.gov.hk)

- 국민 서비스정보보호 및 인터넷 윤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민 홍보를 위한 유무선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일반 사용자, 아동 및 학생, 교사 및 학부모, IT 전문가, SME 별로 맞춤형 정보 제공

온라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i Learn at home' Programme)

- OGCIO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22개의 '온라인 학습 지원센터' 설립
 - 저소득 가정의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을 위한 PC 장비 및 기술 지원,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용자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

〈표 6〉 동서부 온라인학습지원센터 현황

구분	WebOrganic(동부센터)	Net-Com rock n'roll(서부센터)
지역	南区, 湾仔区, 中西区, 油尖旺区, 深水埗区, 葵青区, 荃湾区, 屯门区, 元朗区, 离岛区	东区, 九龙城区, 黄大仙区, 观塘区, 沙田区, 大埔区, 西贡区, 北区
콜센터	2922 9200	2520 5820
이메일	info@weborganic.hk	info@e-i.hk
웹사이트	<p>www.weborganic.hk</p> 	<p>www.e-i.hk</p> 

항 목	WebOrganic (동부센터)	Net-Com rock n'roll(서부센터)	합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 수	19,127	20,042	39,169
수혜 대상 가정 수	5,403	3,607	9,010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	2,158	1,074	3,232
PC 판매 대수	2,166	2,361	4,527

출처 : www.ilearnathome.hk, 2012.3.

노년층 대상 포털(www.e123.hk)

- OGCIO는 노년층의 IT에 대한 접근성 향상, IT 지식 및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2011~2012)
 - 2012년 말까지 총 3개의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8400만 달러(HKD)의 보조금 지급 예정

〈표 7〉 노년층을 위한 주요 전자정부 사업

프로그램	주요 내용	시행단체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클럽	노년층을 위한 전문 웹사이트를 구축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Evangelical Lutheran Church Social Service - Hong Kong
사회디지털 캠프 (고령자를 위한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층의 IT 이용 장려 및 확산을 통한 IT 지식 및 기술 교육 · 페이스북 그룹 생성 및 관련 응용 프로그램 개발 ·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자료 제작 · 노년층 IT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Po Leung Kuk(保良局)

디지털TV 웹사이트(www.digitaltv.gov.hk)

- 2004년 7월에 발표한 정부의 지상파 디지털TV(DTT) 전환 정책의 이해 및 원활한 전환 지원
 - 디지털TV 및 다양한 혜택, 정부정책, 단계별 계획 등을 소개

기업서비스

중소기업 지원 및 컨설팅 센터(Support and Consultation Centre for SMEs, www.success.tid.gov.hk)

- 공업무역부(工業貿易署)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원센터 운영
 - 중소기업 관련 활동, 서비스, 기타 시설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비즈니스 전자데이터베이스 무료 제공
 -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Meet-the-Advisors' 및 'SME 중소기업 멘토십 프로그램(Mentorship Programme)' 운영

전자입찰시스템(ETS, Electronic Tendering System)

- 입찰자 등록, 입찰공지, 입찰문서기능다운로드, 업무조사, 입찰건의 제안, 입찰결과 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2000. 4)

-
1. 「**동향분석시리즈**」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수행한 '**정보화정책연구**'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2.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본 내용에 대한 문의나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기획총괄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기획총괄부 **김진숙** 책임연구원(jskim@nia.or.kr)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기획총괄부 **한영미** 책임연구원(ymhan@nia.or.kr)

■ **보고서 온라인 서비스** : www.itglobal.or.kr



한국정보화진흥원

(100-775)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 (무교동 77번지)
Tel 02.2131.0114 Fax 02.2131.0109
www.nia.or.kr